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소관)

2018. 4.

대한민국정부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소관)

2018. 4

대한민국
정부

1. 금융위원회(116건)

1. 新DTI·DSR 등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노령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3
2.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분양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3
3. 거시경제 차원의 충격이 소득분위별 차주들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지수 분석을 시행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 3
4.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실행할 것 3
5. 대부업체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
6. 채무가 연체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제도에 따라 단기간 내 담보권 실행, 원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으로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4
7.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규모 축소 및 불법 사금융시장 이용확대 등 우려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4
8.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통상의 조달금리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
9. 금리인하 요구권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5

10. 대부업 연체채권의 상각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상각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5
11.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 일원화 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에 대한 신용정보사 위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12. 전세금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 인하, 최우선변제권을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유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7
13.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가 일몰예정이므로 일몰 연장에 관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8
14.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부 매칭을 통한 무이자 소액 대출 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 8
15.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에 두고 확실적인 소득기준만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제도 설계를 검토할 것 8
16.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이 중도금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8
17. 제2금융권이 주도하던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 제1금융권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약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것 9
18. 가산금리 결정과정에 있어 은행 간 암묵적 담합 구조가 존재하여 금리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9
19.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산법 일원화를 전제로, 추가적으로 회생기업들에 대한 정책보증기구의 이행성 보증상품 출시, 구조조정 전문 회사 도입환경 조성 등 대안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0

20. 경쟁력과 회생가능성에 기초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명확한 기준 마련, P-Plan 활성화 방안 수립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10
21. 선박금융대출 전체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선박금융대출 규모 및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22. 조선업 저가수주 관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저가수주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11
23.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시 자금조달계획 및 기관간 권한 중복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
24.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금융관행의 틀을 벗어나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	12
25.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전략을 만들며, 핀테크 발전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잘 대처할 것 ..	12
26.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퇴직자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
27. 금융위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13
28.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검사 면제 등 감독·제재 완화를 타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	14
29. 케이뱅크 인가과정 관련, BIS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문제, 주주간 계약서의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특허 의혹에 대하여 엄밀하게 검토할 것	14

30.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 관련 노하우의 활용을 위해 산업은행 외에 기업은행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14
31.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15
32. P2P 대출이 상당부분이 부동산 PF에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P2P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6
33.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법령 적용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16
34.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16
35. 정책금융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으므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별 자금지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36. 혁신형 창업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한 무담보·무보증 자금지원제도, 창업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은행거래처 기반의 기업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18
37.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대상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높은 은행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확대, 대·중소기업 신용평가 차별화 금지, 지원대상 벤처창업 성공 시 지분 부여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8

38. 효성 회계부정 사건 관련 감리위 심의내용(고의 4단계)이 증선위에서 변경 (중과실 2단계)된 점과 관련하여, 내부감찰 및 증선위 재심의 등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19
39. 증선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간담회 기록, 조치대상 기관의 위원 접촉 금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9
40.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증선위 회의의 안전 내용, 발언, 표결 결과, 개회·산회 시간 등을 상세 공개하는 내용의 개 선안을 마련할 것	20
41.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내 법률·행정전문가를 포함한 지원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것	20
42.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1
4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철저히 대비할 것	21
44.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업무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위에 조사전담기구를 두어야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45.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의 감시·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추천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22
46. 감사 보조조직의 인사나 예산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이나 감사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2
47.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범죄이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48. 경제개혁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건의 관련, 특정 단체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안전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책건의 수렴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23
49. 금융위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련,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내부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3
50.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셀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4
51.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은행이 발주하여 평가지표의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24
52. 신보·기보가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기업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공탁대신 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 에서 법원과 협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25
53.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금융기관별로 운용배수가 상이한 상황 이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가 운용배수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
54.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금감원에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25
55.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사업 수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26
56.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대학을 서열화하여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외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기업들과 금융공공기관 등의 유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	26

57. 예탁결제원 정관에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업무인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7
58.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상 인가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	28
59.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불확실성 및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여건 진단 및 이들 제도의 연착륙 방안 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28
60.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혜성 자산운용규제를 개선할 것	29
61.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제재권한의 법령 명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29
62.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 고소 등을 통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9
6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부가보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및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것	30
64.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0
65.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관련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수가제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31
66.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1

67.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2
68. 금융업 인가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사회적 신용요건에 차이가 있는바, 업권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의 인가 요건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2
69. 금융투자업자의 자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2조 중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에 관한 규정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2
70. 초대형 IB 육성 관련, 종합투자계좌(IMA) 원금보장 기준(8조원), 단기어음 발행 인가 기준(4조원)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성 기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3
71.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34
72.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과도한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완화, 선물·옵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폐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신규 투자자에 대한 1년간 옵션매도거래 금지 폐지, 상장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34
73. 노후화된 코스콤 전산설비 관련, 별도 전산실 구축 또는 이전 등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	35
74.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관련, 유동성 및 거래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공시제도 미적용에 따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검토할 것	35
75. 장외주식 사설거래 관련, 사설사이트를 통합 불법행위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설 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6

76. 공모펀드 시장의 계열사 펀드 위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50% 규제의 연장 및 강화를 검토할 것	37
77.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성과 위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구조 개선을 검토할 것	37
78.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본시장 유동성 및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며, 증권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강화되었으므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8
79. 국민연금에서 수탁받아 SRI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ESG 관련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의 행위를 한 사례가 지적된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것	38
80.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증권회사별로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 바, 각 증권회사의 부당이득금 환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증권금융은 입법미비에 따라 아무런 처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39
81.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납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39
82. 삼성 차명계좌 관련,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0
83. FIU가 다스 비자금 및 관련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다스 비자금 등 차명 계좌에 대한 조치 방안	40
84. 높은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관리비용 등의 조사를 위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할 것, 산업은행의 경우 2대주주로서 주주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40

85. 공영홈쇼핑 임직원과 법무법인 원 소속 임직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타 유사한 행위들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고할 것	41
86. 금융기관의 법령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2
87.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설에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2
88. 연기금 및 각종 공제회들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3
89.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3
90.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압류계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착오송금인 경우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44
91. 금융위 주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협동조합형 은행 설립을 검토할 것	44
92.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45
93.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45
94. 청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	46
95.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으로 코스콤 기술연구소와 데이터센터를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7

96.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행정인력을 자체 채용하지 않고 부산시, 금감원, 은행연, 예탁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요인력을 금융위 예산으로 자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7
97.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과 정규직 채용률이 저조하고, 기관의 핵심부서와 주요행사가 서울 사옥에서 집중 개최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7
98.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가상통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49
99.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금융거래 제재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9
100. 은행에서 개인통장 개설시 개인명의 옆에 임의단체명을 확인서류 제출 없이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50
101. 은행계정상 기타 부채계정 이자수익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0
102. 시중은행이 외화환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0
103.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특별지원 관련, 장기적 계획 하에 지원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것	50
104. 국정원의 시중은행-보수단체 간 광고매칭 지원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1
105. 전시상황 및 EMP 공격 등에 대한 대비조치를 철저히 하고, 금융분야 관련 전시 계획 중 국민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51

106. 시중 금융기관의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 당국의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할 것	52
107. 금융업의 업권별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 회사 자체운용인력에 대한 전문성, 투자리스크 관리, 인센티브 구조 등에 대해 점검할 것	52
108.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52
109.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금융사용자협의회 복원 및 금융권 산별 교섭 복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52
110. 금융기관용 對도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안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3
111.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할 것	53
112.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가 범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하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할 것	53
113.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라 금융서비스 축소, 불완전 판매,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54
114. 씨티은행의 대규모 인력감축 관련, 은행법 제8조의 인가 요건인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54
115.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열거주의 규정중심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4
116. 한화손해보험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확정과 관련, 유사 사안들에 대하여 점검할 것	55

2. 금융감독원(54건)

1. 신보 보증범위 초과분에 대한 은행의 추가담보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59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9
3.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채용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9
4. 18세 미만 부적격자의 재형저축 부당 가입에 대해 점검할 것 60
5.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대출 당일 상환하는 경우 카드사별 이자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60
6. 신용카드 분실 시 이용하는 일괄신고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61
7. P2P 업체의 연계대부업 등록이 의무화되는 2018년 3월 이전까지 대출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 61
8. P2P 대출의 부동산PF 편중이 심각화되며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주요 정보 누락 및 허위 광고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것 61
9. 저축은행점사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금감원의 전결권 행사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2
10. 카드론 연체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 62
11. 과도한 대출광고 등 저축은행의 고금리 가계대출 원인을 파악하여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2

12.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가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보다 보험료 인상 및 카드사 수익확대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63
13. 인터넷전당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64
14. 인터넷상의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4
15. 금융기관이 관리중인 대출거래제한자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여신심사 시 연체 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5
16. 카드사들의 고금리 대출 관행에 대해 시장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66
17. 군입대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감액 또는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 66
18. 보험가입 후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6
19.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 도입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 66
20.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7
21.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 대리청구제도 등 장애인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한 기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67
22. 중단된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조속히 재개할 것 67
23.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차량이력 정보(카히스토리)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정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8
24.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8

25.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8
26. 치매보험의 보상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	68
27. 해외 여행자보험과 관련하여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까다롭지 않은지 점검할 것	69
28.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69
29. 보험사의 민원 수용률 제고 및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9
30. 보험 민원 1위, 민원 불수용 1위, 의료자문 1위인 삼성생명·삼성화재의 보험지급 적절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 필요	70
31. 변액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상품요약서 등에 보험료 납부액, 사업비액, 해약손실액, 손실률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 보험용어 개선으로 소비자 중심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70
32. CJ그룹의 보험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70
33. 자본시장법상 유상감자 승인 요건에 “감자의 불가피성”을 추가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유상감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71
34. 자베즈파트너스의 현대증권 인수 관련 이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검사 실시를 검토할 것	71
35.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71
36.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2
37. 자사주 취득 한도인 배당가능이익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72

38. 기업 재무공시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도입을 금융업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2
39. 상장기업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	73
40. 법무법인 원 구성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	73
4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감사인 지정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3
42. 케이티엔지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투자 관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감리를 검토할 것	74
43.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할 것	74
4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	74
45. 교통사고 가해자 요청에 의한 검사프로그램(마디모)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남용을 방지할 것	74
46.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위해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	75
47. 차명주식거래 등 직원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주식거래 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75
48. 공개하지 않았던 금감원 직원의 징계사실을 조속히 공개하고 징계 내용 공개방안을 강구할 것	76
49. 금융위·감독원 출신 퇴직자가 직원채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로비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것	76
50. 이건희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재점검할 것	76
51. 농해수위 국감에서 제기된 농협은행의 사기분양 대출 의혹을 점검할 것	77

52. 대주주 회사 출신 전직 임원들이 출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77
53.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77
54.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78

3. 예금보험공사(24건)

1.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 PF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	81	10. 초대형IB의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금융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5
2. 가계부채 급증 및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	81	11.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86
3. 비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연 1회 공동검사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검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81	12. 차등보험료율제 차등폭 확대 및 차등 등급 세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86
4.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예금보험료율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	82	13.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을 포함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도입하여 대형은행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혈세투입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6
5. 우리은행 매각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잔여지분의 조기 매각 방안을 검토할 것	83	14.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심의회(FFIEC)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제수준의 정보 공유체계를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정보공유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7
6.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소수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할 것	83	15. 예금보험위원회 안전제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7
7.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에 대한 정리를 검토할 것	84	16. 민원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7
8. 미국의 금융안정협의회(FSOC)와 같이 법률적 근거를 가진 범정부 금융안정 협의체 구성방안을 검토할 것	84	17. 은닉재산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88
9.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는 은행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비대면거래에 맞는 표시설명확인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	85	18.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에 합법적인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건물가치를 정상화 하고, 공매를 통해 재산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	88
		19. 부실을 막기 위한 예보의 단독조사 요건 완화,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권한 강화 등 예보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89
		20.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 기준을 바꿔 회수성과를 부풀린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	89
		21. 파산재단 자산의 신속한 환가 등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0

22.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위협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특정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 시스템을 마련할 것	90
23.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보상품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일부 금융투자회사를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1
24. 초대형IB 부실방지 및 기금손실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	91

4. 한국자산관리공사(13건)

1. 복지카드 사용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직원 해외여행 행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95
2. 채권추심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CA사(신용정보사) 수수료 및 CA사 관리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95
3. 비위행위로 직원이 구속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시 휴직명령제도 도입 등 자산관리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급여 환수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96
4. 공사 직원 등의 국유재산 불법매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	96
5. 중소기업을 위한 자산매입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지원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97
6.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98
7.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특히 국유재산관리사업의 평가실적 저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8

8. 미활용·무단점유 국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99
9.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에 대한 재임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00
10. 바뀔드림론 제도의 실효성 및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01
11. 물납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재매입 방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102
12. 행동강령상 제한된 임직원의 주식거래 등에 대해 현황 파악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102
13. 차세대 온비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구축·운영까지 자체감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방안을 강구할 것	103

5. 한국주택금융공사(23건)

1. 전세보증 취급요건을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으로 구분한 현행 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107
2.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사회적배려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7
3.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보증한도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107
4.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거절비율이 높으므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적보증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8
5. 전세 이용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반환보증 도입을 검토할 것	108
6. 전월세 매치제도 도입 등 서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09

7. 비소구대출 활성화 및 시중은행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109
8.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부채의 리스크 조절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주택 담보대출의 유동화방안을 검토할 것	110
9.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110
10. 일시적 2주택자 중 투기목적의 정책모기지 이용자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10
1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가입요건 완화 등 상품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111
12. 보금자리론 대출이 아파트에 편중된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	111
13.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소득이나 주택 외 다른 자산이 많은 사람의 가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12
14.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법무사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신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입자가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2
15.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8년 부터 감소하고, 2020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한 가입자 부담 완화 대책을 강구할 것	113
16. 주택연금 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인하 및 해지 시 이자부담을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고정금리상품의 도입을 검토할 것	113
17. 주택연금 가입연령 요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허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등 수요확대 및 가입자 편의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114
18.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4

19.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후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2015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것	115
20. 주신보계정에서 주연보계정으로의 전출 허용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검토할 것	115
21.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 및 수급액의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과도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15
22. 정책모기지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를 위해 정부출자 확대 및 출자구조 다변화 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116
23. 해외연수 중인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16

6. 신용보증기금(24건)

1.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보증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119
2.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20
3.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20
4. 중소 조선사 대상 RG 보증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증액 및 등급 조정을 검토할 것	121
5. 퍼스트뱅크 기업 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2
6.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 부실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2

7. 정책금융 본연의 업무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정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3
8.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직 신설 및 인력 파견 등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23
9.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비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보증부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히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4
10.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과 제조업 등 주력사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4
11.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25
12.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한 기업이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126
13.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 대출·보증의혹에 대해 소상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126
14. 마포사옥을 보육, 컨설팅, 금융 등 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혁신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기업들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7
1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기업 간 M&A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27
16. 매출채권보험의 부실률이 낮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관련 업종들에 대한 보험가입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128
17. 사회적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9

18. 저신용등급 기업이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목표 달성과 리스크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9
19. 위탁보증 도입 시 은행의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130
20.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약보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131
2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기업 육성 중심의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132
22. 창업기업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32
23. 원금감면이 수반되는 재기지원보증 공급 증가에 대비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및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33
24.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134

7. 한국산업은행(28건)

1. 대우조선해양의 내부개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직접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137
2. 대우조선해양 우수 설계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인력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137
3.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138
4. 대우조선해양 내 무급휴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138

5. 대우조선해양이 전국대학을 1~5군으로 서열화해 서류전형 검토기준으로 삼고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38
6. 자본시장 활용 등 기업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할 것	138
7. 기간산업 기업 구조조정시 산업적 비전과 재편 전략이 적극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139
8.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139
9. 현대상선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현대상선의 발전 방향에 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	140
10. 한국GM의 2대주주로서 산업 은행이 매출원가 산정내역 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40
11. 출자회사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정기적으로 출자회사 관리현황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1
12. 여신심사 과정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할 것	141
13. 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 관련 신용위험분담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2
14. 퇴직연금 끼워팔기 관행 및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없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에 대해 재점검할 것	143
15. 서양네트웍스 관련 온렌딩대출이 적정한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점검할 것	144
16. 창조성장금융부문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144
17.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고위직의 여성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144

18. 담보 및 재무상태가 양호하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145
19.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 ·	145
20. 산업은행의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재점검할 것	146
21. 산업은행 퇴직자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철저한 내부감시 시스템과 재취업자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	147
22. 경영관리단 파견 후 구조조정 관련 업무로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	147
23. 시행세칙에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 및 찬반 기록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7
24.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주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제도가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타당성에 관해 재검토할 것	148
25.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스스로 고문으로 선정한 고문들의 자문료 환수여부를 검토할 것	148
26.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로서 석탄화력 발전을 포함한 기존 투자에 대해 재검토하고, 향후 투자방향에 대하여 점검할 것	149
27. 적도원칙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산업은행의 대응전략을 검토할 것 ...	150
28.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이차보전자금이 특정 대기업에 약 50%집중되어 지원의 형평성 및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 관해 점검할 것	151

8. 중소기업은행(18건)

1. 향후 한계기업의 건전성 악화 및 이에 따른 BIS 비율 하락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155
---	-----

2. 실적이 저조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대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55
3. 영화산업 투자 시 수익성 외 투자목적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6	
4.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및 절차 위반, 타 부처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할 것	156
5.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57
6. 영내사고 보상이 제외된 나라사랑카드 특약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157
7.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출자한 홈앤쇼핑의 갑질행태 및 배임문제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	158
8. 자회사 재직 중인 퇴직임직원의 비위 사실 인지 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	158
9. 선박금융대출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조선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158	
10. 기술금융 취급 시 담보 취득 비중이 높은 점 등 보수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 · 159	
11.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59
12. 퇴직연금 끼워팔기 관행 및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없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에 대해 재점검할 것	160
13. 사회적기업의 여신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0
14.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0
15. 승진 등의 인사운용 시 열악한 여성인력 활용실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161

16. KDR한국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낙하산 인사, 과당배당, 해당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61
17. 자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KT&G 주식을 조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62
18.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 ····	163

9. 한국예탁결제원(15건)

1. 일산사옥을 매각할 경우 시설 재구축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본사 소재지 근처로 이전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각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167
2. 기존 핀테크 개념에 자본시장, 자산관리 개념이 추가된 캡테크(cap-tech) 산업 육성 관련 정기협의회를 운영 중이나,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2건만 상품화 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므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67
3. 최근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으나, 국내 증권사의 요청이 큰 미국이 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68
4.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라 자본시장 전반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예탁결제원의 결제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68
5. 전자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도입 계획인바, 보안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	169
6. 현재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신탁업무 관련, 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을 근거로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고 수행중이나,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탁업 업무 인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9
7. 2019년 도입 예정인 전자증권제도의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 ····	169

8. 2018년에 새도보팅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나, 아직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171
9. 성과연봉제 도입 직후 이사회를 거쳐 이를 폐지하였으나 성과연봉제의 내용과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방안을 강구할 것 …………… 171
10. 2019년 개관 예정인 부산증권박물관 건립 관련, 콘텐츠·프로그램 및 인테리어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172
11. 이사회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72
12. 공매도 관련,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자가 기관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대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주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등 공매도 거래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172
13.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고용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173
14.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락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173
15. 직원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모집에 따른 모집수당을 수수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74

10. 한국해양보증보험(2건)

1. 민간출자분 계획이 반복적으로 미달성되고 있으므로 업계 현황 및 관련기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현 가능한 예산과 계획을 수립할 것 ……… 177
2. 국내 조선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당초 목적에 맞게,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77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新DTI·DSR 등 최근 발표된 가계 부채 대책으로 인해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노령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新DTI, DSR 도입시,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호방안* 강구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17.11월)</p> <p>* 청년층·신혼부부 장래소득 인정한도 상향,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의 일시적 2주담대 차주에 대해 완화된 기준 적용 등</p>
2.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을 분양 받았으나 분양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8.2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8.2대책 이전의 규정 적용 (감독규정 부칙 3조)</p>
3. 거시경제 차원의 충격이 소득분위별 차주들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지수 분석을 시행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하여 취약 차주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음</p>
4.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실행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18.2.1)하고, 법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 진행중*</p> <p>* 감독대상 금융그룹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 TF를 구성·운영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가칭) 제정안을 연내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5. 대부업체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대부업 대출은 DSR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신청원, 대부업협회 등과 협의하여 대부업대출 정보가 DSR 산정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p>
6. 채무가 연체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제도에 따라 단기간 내 담보권 실행, 원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으로 차주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연체발생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최대 1년) 유예하는 제도 도입('18.2월)</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기한이익상실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음</p>
7.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규모 축소 및 불법 사금융시장 이용확대 등 우려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8.1.11일 부처 합동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p> <p>① 불법사금융 확대 방지를 위하여 '18.2월~4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책임 강화 등 추진</p> <p>② '18년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7조원 공급 등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지속</p> <p>③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복지지원 연계(복지부 협업)를 통해 자금애로 경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8.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통상의 조달금리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7.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 업체에 대한 검사·점검시 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 적정성에 대해 상시 점검 중으로, 아직까지 위법·부당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p> <p>* '17.11월~'18.2월간 점검업체는 10개사</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대부업체의 특수관계인 차입시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p>
9. 금리인하 요구권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토록 금융권 전산시스템 개선 및 약관 개정을 진행중</p> <p>* '18년 하반기 완료예정</p> <p><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에게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 으로 알려주는 등 안내를 강화</p> <p>○ 금리인하요구권 관련내용을 금융교육시 적극 반영</p>
10. 대부업 연체채권의 상각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상각 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채권매각 및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개선을 통해 금융 회사의 소멸시효 연장시 연장 필요성 검토 등 준수사항 명확화*</p> <p>*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매각 가이드라인 ('18.4월중 시행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등이 있으나, 채권자도 채권 부실에 대한 책임과 손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p><input type="checkbox"/> 각 금융업권별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기준 명확화 추진(업권별 협회 규정)</p> <p>* 은행('18.1월), 제2금융권('18.3~4월) 등</p> <p><input type="checkbox"/>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전한 채권 매매, 소멸시효 연장 업무 관련 기준 수립 의무 부여 추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p>
11.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 일원화 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에 대한 신용정보사 위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캠프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는 채권 추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련 기능 및 인력 감축</p> <p>○ 다만, 위탁추심의 경우에도 불법·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캠프가 직접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p> <p>* '17년 제도개선</p> <p>① 추심직원의 고용안정화를 통한 불법·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CA사 선정 시 "추심직원의 정규직화" 신설('17.2)</p> <p>② 2년내 감독기관 제재 2회시 계약해지·3년간 입찰참여 불가('17.1)</p> <p>③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표준 안내문 마련·배부('17.3)</p> <p>④ 위탁 CA사 대상 채권추심업무 가이드 라인 준수 및 채무고객 인권존중 교육 실시 요청('17.11.13)</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추심위탁 기준에 대해 지속 보완 및 적정 위탁규모에 대해 검토</p> <p>○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관리제도 개선 지속 추진</p>															
12. 전세금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 인하, 최우선변제권을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유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7년중 집주인 동의 면제('17.6월), 보험료 인하('17.3월) 등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함</p> <p><input type="checkbox"/> '17년부터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여 전세금보장보험의 손해율 등을 보아가며, 보험료 추가 인하 방안을 지속 고민·검토</p> <p>* 연도별 합산손해율 추이(단위 : %) (‘15) 56.4 → (‘16) 45.0 → (‘17) 128.8</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등 임차인의 전세금 걱정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홍보 강화 등 지속 노력</p> <p>* '18년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연간 1백만원 한도)</p> <p>< 지역별 최우선변제권(임대차보호법) ></p> <table><tr><th>지역</th><th>적용대상</th><th>최우선변제권</th></tr><tr><td>서울</td><td>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td><td>3.4천만원</td></tr><tr><td>과밀억제 권역</td><td>8천만원 이하</td><td>2.7천만원</td></tr><tr><td>광역시</td><td>6천만원 이하</td><td>2천만원</td></tr><tr><td>기타</td><td>5천만원 이하</td><td>1.7천만원</td></tr></table>	지역	적용대상	최우선변제권	서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3.4천만원	과밀억제 권역	8천만원 이하	2.7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이하	2천만원	기타	5천만원 이하	1.7천만원
지역	적용대상	최우선변제권														
서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3.4천만원														
과밀억제 권역	8천만원 이하	2.7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이하	2천만원														
기타	5천만원 이하	1.7천만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3.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가 일몰예정이므로 일몰 연장에 관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등록세 면제 일몰 관련하여 소관 부처(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p> <p><input type="checkbox"/> '18년부터 등록면허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것에 대응하여 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록면허세 부담이 약 50%까지 감소 '18.1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20년 이후에도 등록면허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14.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부 매칭을 통한 무이자 소액 대출 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재원마련, 사업의 지속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p>
15.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에 두고 획일적인 소득기준만으로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제도 설계를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유무 (생계형 재산은 산정 제외)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중</p>
16.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이 중도금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p><현 황></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중도금대출은 지역에 따라 40~60%까지 가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도금대출 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p> <p>*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 한다는 점에서 중도금대출이 필요 없음</p>
17. 제2금융권이 주도하던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 제1금융권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약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원칙적으로 자동차담보대출은 특정 업종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은행 등 제1금융권의 진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 (시장경쟁의 영역)</p> <p>○ 또한 은행 등의 참여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서민 금융 이용시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측면</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캐피탈사들도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을 통해 조달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p> <p>○ 필요시 관련 규제 합리화 조치를 추진하겠음</p>
18. 가산금리 결정과정에 있어 은행 간 암묵적 담합 구조가 존재하여 금리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 실시 중(금감원)</p> <p><input type="checkbox"/>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쟁이 활성화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수 있도록 「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등 추진</p>
19.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산법 일원화를 전제로, 추가적으로 회생기업들에 대한 정책보증기구의 이행성 보증상품 출시, 구조조정 전문회사 도입 환경 조성 등 대안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p> <p>○ 유암코(UAMCO)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추가로 부여('15.12월)하여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유도하였고,</p> <p>○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17.12월)함</p> <p>* 서울보증보험(SGI)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 제공 계획도 포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기촉법과 도산법의 일원화 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p> <p>○ 법무부·대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계획</p>
20. 경쟁력과 회생가능성에 기초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명확한 기준 마련, P-Plan 활성화 방안 수립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 진행중</p> <p>*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구축,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도입,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1. 선박금융대출 전체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선박금융대출 규모 및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조선업 및 해운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선박 금융 취급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p> <p>○ 신조 지원 프로그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시중은행의 선박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수부·기재부 등과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마련·발표 예정</p>
22. 조선업 저가수주 관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저가수주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국책금융기관(산은·수은·무보)이 참여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운영중(‘16.5월~)</p> <p>○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적정 이익을 확보한 수주전에 한정하여 국책금융기관이 RG를 발급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지속 운영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3.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시 자금조달계획 및 기관간 권한 중복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취지대로 해운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수부·기재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설립위원회를 거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예정(7.1.)</p>
24.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금융관행의 틀을 벗어나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변화된 대내외 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7~‘19) 수립* 및 시행</p> <p>* ① 자본시장 국제화,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통합성 제고,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 수립</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연초에 최대한 빠르게 수립·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p>
25.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전략을 만들며, 핀테크 발전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잘 대처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서울·부산의 특화전략 수립*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내실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글로벌 금융변화에 대처해 나가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서울 :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 지속 개선 및 핀테크 산업 집중육성</p> <p>부산 : 해양·선박산업을 활용하여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발전전략 수립</p>
26.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퇴직 자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해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부산 지역의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지원을 위하여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자를 공모로 선정하고('17.9월), '18.9월 과정 개설을 추진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풍부한 퇴직자산, 발달된 ICT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추진하고,</p> <p>*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SWOT 분석 및 추진과제 포함</p> <p>○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차질없는 개설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 추진</p>
27. 금융위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성장사다리펀드는 '18년 상반기 중 하위펀드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표본검사를 마무리하고, 불합리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p> <p>○ 관련 조항 발견시,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벤처캐피탈 회사를 소관하는 부처인 중기부와 협의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8.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검사 면제 등 감독·제재 완화를 타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검사팀)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검사 실시</p> <p>* 신설 후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부문검사 실시 가능</p> <p>○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증자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p>
29. 케이뱅크 인가과정 관련, BIS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유권 해석을 내린 문제, 주주간 계약서의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하여 엄밀하게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과정 전반을 점검·논의('17.8월~'17.12월)</p> <p><input type="checkbox"/>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 예정('18.1분기)</p> <p>* 아울러, 케이뱅크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p>
30.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 관련 노하우의 활용을 위해 산업은행 외에 기업은행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집행시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음</p> <p>*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 관련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산은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지원 금액한도를 상향조정**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조원 중 95.2%를 핵심분야에 공급 ** 시설자금 300억 → 1,000억, 운영자금 100억 → 300억 □ 한편, '17년 추경(800억원)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산은에 추경자금이 배정됨에 따라 산은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하였음 ○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
31.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토록 지도('17.2월~)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투자자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시 적극 대응 하겠음 <p>* (예) 클라우드펀딩 : 청약증거금에 대한 상계·압류금지, 양도·담보제공 금지(자본시장법 제117조의8)</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32. P2P 대출이 상당부분이 부동산 PF에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P2P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P대출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18.3.2) ○ 부동산PF 사업정보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행('18.2.27)
33.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법령 적용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여 발표함* <p>* 클라우드펀딩 주요동향 및 향후계획('18.1.25) - 임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신고의무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관련의무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사항을 포함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8.3.9)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8년 하반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34.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3.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 ○ 비식별조치의 법적근거 및 절차 마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화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해서도 보안대책 수립 등 관리·감독 실시 * [신정원] IT 현황 진단 및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IT 보안관제(매일), IT 취약점 점검(매월) 등 실시 * [금보원] 중요단말 지정 및 관리 등 보안대책 적용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18.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35. 정책금융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으므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별 자금지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자산, 업력, 자본금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창업생태계 자금배분 분석 결과, 벤처·중소기업 창업초기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반면, 성장단계에는 자금공백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 혁신기업의 성장·회수를 집중 지원하는 성장지원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결정(3년간 8조원)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중소기업의 업력,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36. 혁신형 창업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한 무담보·무보증 자금 지원제도, 창업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은행거래처 기반의 기업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담보나 보증이용이 어려운 창업기업이 설비, 지재권 등 동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금융을 통한 신용중심 대출관행도 지속 확산 추진 *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검토 중 <input type="checkbox"/> 한편, 금융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폐지(4.2일) 할 계획
37.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대상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이 높은 은행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확대, 대·중소기업 신용평가 차별화 금지, 지원대상 벤처창업 성공 시 지분 부여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자산건전성 분류, 신용평가 체계 등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변경에는 신중검토 필요 ○ 다만, 은행 등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input type="checkbox"/>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금융위 차원의 재기·재창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신복위를 통해 성실실패자 선별절차를 신속화, 투명화하고 채무감면과 재기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17.9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국내 벤처투자규모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도입 예정인 혁신모험펀드 운영과정에서 초과수익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예정
38. 효성 회계부정 사건 관련 감리위 심의내용(고의 4단계)이 증선위에서 변경(중과실 2단계)된 점과 관련하여, 내부감찰 및 증선위 재심의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선위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선위 재심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재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참고로 증선위는 효성 조치와 관련하여 검찰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효성 관련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찰 정보사항으로 제공하였음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의견 진술기회 확대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제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18.2.1)
39. 증선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간담회 기록, 조치대상 기관의 위원 접촉 금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증선위 사전간담회 기록을 위해 일지를 작성·관리 (시행중) <input type="checkbox"/> 제재대상자가 증선위 심의 前 소명할 수 있도록 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가 지정하는 장소(예: 금융위 회의실 등)에서 실시토록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과 제재당사자의 비공식적 만남, 개별접촉은 금지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18.2.1.)
40.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증선위 회의의 안건 내용, 발언, 표결 결과, 개회·산회 시간 등을 상세 공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설치법』 개정('17.11.28.)에 맞춰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 개정('17.12.6.)하고, 상세 의사록을 작성·공개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공개 중인 의사록의 내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1.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내 법률·행정전문가를 포함한 지원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것	<p>< 처리결과 ></p> <input type="checkbox"/>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는 금융행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여 권고안을 마련·발표 ('17.12.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원 지원을 위해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금융행정혁신위 활동을 지원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세부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 하여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중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추진이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서도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협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
42.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예정('18.1분기)
4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철저히 대비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 관계기관(기재부, 금감원 등)간 긴밀한 협의,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
44.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업무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위에 조사전담기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패스트트랙(수사기관 즉시 이첩),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조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금감원간 조사권한에 차이가 있으며, 초기 사건분류 등 긴밀한 협조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업무중복이 발생하지는 않음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 문답 등 임의조사만 가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조사 활성화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계획
45.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의 감시·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추천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여를 금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18.3.15)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18.상) 및 국회통과 추진
46. 감사 보조조직의 인사나 예산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이나 감사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감사 보조조직에 대한 감사위원의 관할권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금융회사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18.3.15)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18.상) 및 국회통과 추진
47.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범죄이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공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시 주체인 기업과 감독당국이 임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이력 조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
48. 경제개혁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건의 관련, 특정 단체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안건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책건의 수렴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T/F*에서 시민단체건의 사항 중 기업공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질서 확립 T/F : 기업공시, 회계, 불공정거래, 스튜어드십코드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 향후 더욱 균형감을 갖추고 정책건의 수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
49. 금융위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련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내부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재취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 재취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의 지속적 개정 등 재취업요건을 강화*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기간 연장(퇴직 후 2년 → 3년), 기관심사대상자 확대(1급 →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기관 확대(협회 추가)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퇴직자의 청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의 압력이나 부정행위 등에 직원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 이를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나가겠습니다.
50.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셀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금융권 고액연봉자의 개별보수 지급현황을 금융회사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18.3.15)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18.상) 및 국회통과 추진
51.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은행이 발주하여 평가지표의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은 금융위가 제시한 안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세부지표와 기준 등을 정교화하기 위한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연구용역 이후 최초 검토안보다 강화된 경영평가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경영평가를 위해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경영평가지침을 토대로 '17년 경영실적 평가 진행할 계획
52. 신보·기보가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기업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법원과 협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공탁이자율은 기금운용수익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신보는 법원에 지속적으로 현금공탁 최소화를 요청 중 * '16년 공탁이자율 0.1%, 기금운용수익률 1.8%
	<input type="checkbox"/> 다만, 법원에서는 국가 이외에는 예외없이 현금공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를 신설하는 데에도 매우 신중한 입장
	<input type="checkbox"/> 법원에 대해 보증보험 방식 활용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는 등 협의하여 나가겠음
53.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금융기관별로 운용배수가 상이한 상황이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가 운용배수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정 보증배수 산출 및 관리를 위해 금년도 공사 업무계획에 반영 하였으며,
	<input type="checkbox"/> 금년 중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 을 통해 적정 보증배수 검증 및 보증배수 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음
54.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금감원에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p>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계획을 사전보고하고 검사결과를 사후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승인한 업무계획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보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은 사전보고한 계획에 따라 법령 준수여부, 건전성 등을 감독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산은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출자회사 감독·관리를 위해 설치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 ('16.2월)를 통해 출자회사의 방만경영 방지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5.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사업 수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계획></p> <input type="checkbox"/> 산은, 기은은 영업점에 구축성 행위의 엄격한 금지 등 퇴직연금업무 수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조치 ('17.11월)
	<input type="checkbox"/> 산은, 기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격기 등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철저히 근절하고,
	<input type="checkbox"/>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에 맞게 시장마찰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음
56.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대학을 서열화하여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에	<p><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p> <input type="checkbox"/> 산은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신입사원 채용*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외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기업들과 금융공공기관 등의 유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p>	<p>공정한 채용절차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17.11월), 회사는 관련 기준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18.4월)</p> <p>* '15년 이후 신입 대졸채용 全無</p> <p><input type="checkbox"/>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채용비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련자 징계 및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18.3월)</p> <p>* (기간) '17.10.23~12.20 (대상) 예보, 산은 등 12개 금융 공공기관 (결과) 제도개선 32건, 채용불공정 8건, 규정위반 5건</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산은 출자회사 및 금융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음</p>
<p>57. 예탁결제원 정관에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업무인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74년 증권거래소(現한국거래소)가 100% 출자하여 (주)한국대체결제(現예탁결제원) 설립된 후</p> <p>○ '94년 증권예탁원으로 전환하며 주주 다원화 등을 위해 거래소 지분율을 75% 수준으로 축소</p> <p><input type="checkbox"/> 그 이후에도 한국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을 축소를 위해 양사가 지속 노력해왔으나,</p> <p>○ 저조한 배당률, 낮은 환금성(비상장 주식) 등에 따른 투자매력도 저하로 매수자 확보가 곤란한 등 추진에 한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예탁결제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유한도 등을 정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기타 주주 등과 협의해 나가겠음</p>
<p>58.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상 인가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 舊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05.8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교환사채 등 업무에 한정하여 인가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p> <p>* 신탁표시를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業으로 영위하지 않는 한 신탁업 인가 불필요</p> <p>** 상법시행령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p> <p><input type="checkbox"/> 신탁방식 업무는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토록 지속 규율</p> <p>* 신탁표시 행위에 대한 별도 수수료 부과 불가</p>
<p>59.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불확실성 및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여건 진단 및 이들 제도의 연착륙 방안 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민·관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험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 중임</p> <p>○ 보험사들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하겠음</p> <p>* 신증자본증권 발행요건을 완화('17.8월)</p> <p>* 보험부채 증가에 미리 대비토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단계적 개선('17.12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60.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혜성 자산운용규제를 개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므로 시장충격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충분한 논의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p> <p>○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증시여파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p> <p>○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국회에 제시된 대안(유예기간 7년부여, 자사주 매입방식 완화) 등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바, 국회 논의가 필요</p>
61.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관련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제재 권한의 법령 명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7)</p> <p>○ 향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심평원 등과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관한은 보험업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 조치 가능(\$162, \$209)</p>
62.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 고소 등을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통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p>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 조치 가능(\$5, \$15)</p> <p>○ 향후, 금감원을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연·거절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p>
6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부가보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및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17.9월부터 복지부와 공·사의료보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임</p> <p>○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세부계획이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검증하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음</p>
64.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보험소비자, 보험전문가, 법률전문가 외에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가 평가대상으로 참여하고 있음</p> <p>○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보험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판매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보험업법규(시행령 제29조의2 등)에 따른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교육내용에 반영</p>
65.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관련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수가제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반려동물 식별, 의료비 통제장치 등 반려동물보험 출시의 기초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보험사·전문가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임</p> <p>○ '18년 중 반려동물 관련 위험률을 보험개발원이 산출하여 제공하는 등 보험사의 반려동물보험 개발을 지원할 예정임</p>
66.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등 공매도 투자자 피해 보완책을 추진 해왔음 ('17.3월 시행, '17.9월 지정기준 강화)</p> <p>*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익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p> <p>○ 제도 도입이후 '18.2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약 300건 지정</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부과기준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위반행위 집중 조사해 나가는 한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p> <p>* ①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②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제한</p>
67.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상장사, 증권유관기관들과 함께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18.1월)</p> <p>* (주요내용) 주총분산유도 및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등 주총참여 환경 개선, 소액주주 주총참여 독려 및 대국민 홍보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8.3월말까지 기 마련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p>
68. 금융업 인가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사회적 신용요건에 차이가 있는바, 업권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의 인가 요건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예정('18.1분기)</p>
69. 금융투자업자의 자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2조 중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에 관한 규정이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에 본인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내 국회에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음</p>
70. 초대형 IB 육성 관련, 종합투자계좌(IMA) 원금보장 기준(8조원), 단기어음 발행 인가 기준(4조원)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성 기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단기금융업 인가와 초대형투자은행 지정을 받은 회사와의 형평성 등 감안할 때 자기자본 기준 등을 완화하기는 어려운 측면</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초대형 IB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건전성 규제 강화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p>
71.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마련*(1.11.)</p> <p>* (주요내용) 코스닥 자율성·독립성 제고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및 혁신적 플레이어 양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p> <p>○ 기관투자자 벤치마크 지수로서 KRX200도입('18.2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p>
71.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진행 중</p> <p>*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박용진 의원안) '18.3월 정무위에 상정되었음</p> <p>○ 손해배상 시효를 대폭 확대*하고('18.2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유사제도 도입경과 등을 참조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p> <p>* 안 날부터 1년, 있는 날부터 3년 → 각각 2년, 5년</p>
72.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과도한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완화, 선물·옵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폐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신규투자자에 대한 1년간 옵션매도거래 금지 폐지, 상장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옴</p> <p>○ 특히, 상장절차 간소화 및 신상품 상장*, 기본예탁금 인하, 헤지 전용계좌 도입, 교육제도 정비 등을 추진</p> <p>* (신규 상장) ETF 선물, KRX300 선물, 코스닥150옵션, (추가 상장) 개별주식 선물·옵션 19종목</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그간의 제도개선 관련 효과성 검토 등 상황진단을 통해 추가적인 파생 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p>
73. 노후화된 코스콤 전산설비 관련, 별도 전산실 구축 또는 이전 등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코스콤 전산설비의 안전성과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옴</p> <p>* 배관 긴급 보수용 자재 구입 및 냉각수 펌프·냉각탑 일부 교체 등 ('16.9월)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 완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전산설비 안전성 제고를 위해,</p> <p>○ 노후전력 설비 교체 및 개·보수 등 추진(~'18년말)</p> <p>○ 여의도내 또는 여의도 인근지역에 전산실 구축 등 新전산실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음</p>
74.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관련, 유동성 및 거래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공시제도 미적용에 따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KSM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및 스타트업 투자정보 제공 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중</p> <p>○ KSM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한해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적용 배제 등 유동성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p> <p>* '17년 KSM거래건수 큰 폭 확대(3건→134건)</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KSM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등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 추진</p> <p>* 나이스평가정보(주)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KSM등록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정보 제공</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스타트업기업의 상장전 주식거래 기능 강화 및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p> <p>○ KSM기업의 투자정보 제공 및 IR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및 홈페이지 게재 추진</p> <p>* 현재 20개사에 대한 홍보동영상 촬영 진행중</p>
75. 장외주식 사설거래 관련, 사설 사이트를 통합 불법행위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설 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장외주식 거래를 제도권 시장인 K-OTC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p> <p>○ K-OTC 관련 세제를 코스닥 등 장내수준으로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p> <p>* 거래세율 : 0.5% → 0.3% ('17.4.) 양도차익세율 :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면제('18.1.)</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K-OTC 내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등 장외거래가 K-OTC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76. 공모펀드 시장의 계열사 펀드 위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50% 규제의 연장 및 강화를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을 현행 50%에서 25%로 강화*하고, 상시 규제로 전환하기로 하여('17.12월,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 금투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3.9~4.18)</p> <p>*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연 5%씩 단계적 축소</p>
77.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성과위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구조 개선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그간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성과 보수펀드로 설정·설립하거나 자산운용사의 고유자산을 투자(seeding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성을 강화해왔음</p> <p><input type="checkbox"/> PEF 등 사모펀드의 보수체계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으며,</p> <p>○ 개별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운용사 등의 보수체계가 상당부분 성과보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보수체계를 성과에 연계하여 설정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p> <p>○ 사모펀드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의 자율성을 인정하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필요시 성과 위주의 보수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78.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본 시장 유동성 및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며, 증권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강화되었으므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p> <p><input type="checkbox"/>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 등을 점검하고 증권 종사자의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p> <p>○ 다만, 거래시간 연장이 해외투자자 거래증가 등 전체 거래규모를 증가한 측면도 있음</p> <p>* 증시 거래시간 연장 이후('16.8~'18.2) 주식 일평균 거래규모는 동기간('14.8~'16.2) 대비 거래대금 약 13% 거래량은 약 14% 증가</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거래시간 연장이 지나친 업무강도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79. 국민연금에서 수탁받아 SRI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ESG 관련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의 행위를 한 사례가 지적된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사와 ESG 관련 리서치 기관 간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의 행위 사례는 양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의 영역에 해당함</p> <p>○ 이러한 사적 계약에서의 문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사적계약의 영역까지 관리·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사적계약 영역의 문제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리·감독토록 하겠음
80.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증권회사별로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 바, 각 증권회사의 부당이득금 환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증권금융은 입법미비에 따라 아무런 처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금융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내 국회에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추진
81.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보험료를 낮추거나 납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분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를 30% 할인하여 적용 중임 ○ 한편, 금투업권은 '11년부터 예보기금의 목표규모 상한을 초과하여 예금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음 □ 다만, 금융권간 합의를 바탕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소요된 비용은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의 일부로 공동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투업권의 예금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납부대상을 조정하는 경우 타 업권으로 상환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료를 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례와 투자자 예탁금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
82. 삼성 차명계좌 관련,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이자 및 배당소득 차등과세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중
83. FIU가 다스 비자금 및 관련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다스 비자금 등 차명계좌에 대한 조치 방안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U는 수사·조사권이 없는 분석기관으로 검찰 등이 FIU에 다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자금세탁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찰 등 수사·조사 기관에 통보
84. 높은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관리비용 등의 조사를 위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이 한국GM 협조하에 높은 매출원가율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17.11~'18.3)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회계처리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GM에 대해 신속히 감리에 착수할 예정
84. 산업은행의 경우 2대주주로서 주주 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이 소수주주(17%)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것으로 파악 중
	<p>○ 다만 소수주주로서의 한계*, GM측의 비협조로 인한 정보제약, 非채권자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경영건제에 제약이 존재</p> <p>* 이사회결의사항과 주총일반결의사항(과반 찬성)은 산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GM이 표결로 일방 가결 가능</p>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한국GM 정상화방안 논의시 산은의 견제장치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지속
85. 공영흡쇼핑 임직원과 법무법인 원 소속 임직원의 내추럴엔도텍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타 유사한 행위들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획안을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공영흡쇼핑 임직원과 법무법인 원 소속 임직원의 내추럴엔도텍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보고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
86. 금융기관의 법령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법률자문 등 법령해석 지원 강화, 회신 지연시 사전통보제도 도입 등 법령해석 관련 제도 개선 추진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법령해석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 추진 예정(2분기)
87.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설에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하위법령에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08.9.1.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 운영규정」이 시행되고 ‘15.12.31. 총리령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되면서 규제 심사 절차가 더욱 강화
	<p>* 규제의 원칙, 의견청취, 사전보고, 등록·공개 등 규제 신설·강화시에 더욱 엄격한 준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p> <p>○ 특히 감독규정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상위법령 위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근거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p> <p><input type="checkbox"/> 행정지도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 관리 체계화 방안을 마련 중</p> <p>○ 금감원과 협의하여 행정지도 관련 평가 내실화, 행정지도 보고절차 강화 등 구체적 방안 마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행정지도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추진 예정(2분기)</p>
88. 연기금 및 각종 공제회들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와 공제기관 감독 소관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제업 발전 유도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7.5.22.)하였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임</p> <p>* 금융위의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한 재무 건전성 협의 요구 및 소관 부처의 금융위에 공동검사 요구</p>
89. ombudsman 제도가 실질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당초 행정지도관련 건의·개선을 주목적으로 했던 ombudsman을 소비자중심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자문기구로 개편('18.3월)</p> <p>○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소비자 보호 정책 과제발굴에 중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5인의 민간전문가 위촉</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장점검 상시화)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지속하여 국민체감형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개선</p> <p>○ 현장점검시 발굴된 과제를 ombudsman 회의를 통해 객관적·독립적 시각으로 심의하고 정책화</p> <p><input type="checkbox"/> (운영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안전검토를 위해 분기별 ombudsman 회의개최</p>
90.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압류 계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착오송금인 경우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p><input type="checkbox"/>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반환기능 효율화를 추진 중 (금융감독원 주관)</p> <p>○ 전자금융 및 ATM 이용시 착오송금을 최소화하도록 소비자 이용환경 개선</p> <p>○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반환동의가 가능토록 서비스 개선 ('18년중)</p>
91. 금융위 주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협동조합형 은행 설립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p> <p>○ 다만, 이미 국내에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신협, 농·수·산림조합)이 각 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신용평가 시스템, 적정자본 및 전문인력 확보,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에 금융기능 부여할 필요성 검토('18년 下)</p> <p>○ 필요시 신탁중앙회 등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p> <p>○ 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의 금융애로 해소방안*도 함께 강구</p> <p>* (예시) 기존 상호금융기관의 대출확대, 신용보증기관 보증확대 등</p>
92.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공공기관들의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p>
93.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미국, EU, 호주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18.6월)</p> <p>* 현재 무권한거래 개념 도입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종걸의원안)이 발의('16.11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94. 청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수요자맞춤형 금융교육 추진을 통해 청년층 노년층 금융교육을 확대함</p> <p>○ (청년층) 대학 실용금융 강좌, 대학생 금융특강, 사회복지무요원, 신입사원 등</p> <p>* '17년 금감원(101,880명), 서민금융진흥원(596명), 투자자교육협의회(1,500여명) 등</p> <p>○ (노년층)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금융교육 실시</p> <p>* '17년 금감원(10,356명), 예금보험공사(12,080명), 투자자보호재단(60명),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26명)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금융교육기관들의 청년·노년층 금융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p> <p>○ 예비군, 취업준비생 특강 등 청년층 교육접점을 확대</p> <p>○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금융사기 예방 등 노인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p> <p>-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교재 및 동영상 개발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95.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으로 코스콤 기술연구소와 데이터센터를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코스콤은 별도 전담조직(부산센터)을 구성, 부산지역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중심 기관으로 역할 지속 수행 중에 있으며('15년~)</p> <p>○ 코스콤 데이터 센터 부산 이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진행</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시너지 효과와 비용편익 분석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 센터 이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겠음</p>
96.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행정인력을 자체 채용하지 않고 부산시, 금감원, 은행연, 예탁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요인력을 금융위 예산으로 자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8.3월 행정인력 1명을 채용하였으며,</p> <p>○ '19년도에 행정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중기사업 계획에 반영(기재부 심의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행정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국회 등과 지속 협의할 예정</p>
97.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과 정규직 채용률이 저조하고, 기관의 핵심 부서와 주요행사가 서울 사옥에서 집중 개최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p>① 지역인재 채용률 저조 관련</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한국거래소는 부산지역 인재 발굴·채용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전체 거래소 직원 중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 비중이 8%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부산지역인재 발굴 및 채용 확대를 위해 리크루팅 활동 강화 지속 추진</p> <p>② 핵심부서 서울사옥 집중 관련</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한국거래소는 5개 사업본부 중 2개 본부(경영지원본부 및 파생상품시장본부)를 부산에 두고 있음</p> <p>* 임직원 230여명이 부산에 근무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한국거래소는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핵심사업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음</p> <p>③ 주요행사 서울사옥 집중 관련</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한국거래소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정치권, 부산시 등과 수차례 면담 개최를 하였으며, 폐장식 등 주요 행사를 부산에서 진행</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한국거래소는 폐장식 및 부산지역 대표행사 후원 등을 주요 행사가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98.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가상통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1.30일)</p> <p>○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p> <p>* 가이드라인에 의심거래 참고유형 제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p> <p>*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의심거래보고의무 포함)</p>
99.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금융거래 제재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 국제기구의 제재대상자의 목록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既 사용 중</p> <p><input type="checkbox"/> FIU는 국내은행 및 해외지점 준법감시인과 지속적으로 정보교류 실시*</p> <p>* 준법감시인 간담회('17.11.24)</p> <p>* 미 재무부 발간, 대북 금융제재 안내자료 은행권 배포('18.2)</p> <p>* 미국내 금융회사 대상 규제동향 설명회('18.2.13)</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은행권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지속 확대</p> <p>○ 필요시 은행권이 매달 개최하는 준법감시인 모임에 감독당국이 수시로 참여</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00. 은행에서 개인통장 개설시 개인 명의 옆에 임의단체명을 확인 서류 제출 없이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의록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표자명 옆에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금융권과 협의('17.11월)</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이 유의사항 안내 및 모범 사례를 전파할 예정('18.4월중)</p>
101. 은행계정상 기타 부채계정 이자 수익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을 통해 은행의 기타부채 계정 항목의 세부현황 파악 중</p> <p>○ 현황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p>
102. 시중은행이 외화환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외화 환전 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p>
103.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 대상 특별지원 관련, 장기적 계획 하에 지원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17.3월~12월)</p> <p>* 관광업, 여행업, 전세버스 운영업 등 174개 기업에 대해 331억원 지원</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사드배치 보복조치에 따른 피해 확대 등으로 관련 대책 논의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04. 국정원의 시중은행-보수단체 간 광고매칭 지원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추후 금감원을 통해 관련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
105. 전시상황 및 EMP 공격 등에 대한 대비조치를 철저히 하고, 금융분야 관련 전시 계획 중 국민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금융권은 EMP 공격 등에 의한 전산 센터 마비시 비상대책을 수립·운용 중 * 재해복구센터 구축, 데이터 소산 등 ○ 아울러, ‘핵 EMP’ 등 대규모 공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적 대응준비도 강화 할 계획 <input type="checkbox"/> 전시상황에 대한 대비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안보 및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시계획인 충무계획을 매년 정비하고 있고, 을지연습을 통해 검증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은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 대국민 공개나 홍보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비상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항임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과기정통부 주관 EMP 취약점 분석·평가 시범사업 적극 참여 <input type="checkbox"/> 2018.7월, 충무집행계획 작성시 필요 사항은 반영하고, 을지연습(8월)을 통해 검증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06. 시중 금융기관의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을 통해 해외 부실채권 회수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
107. 금융업의 업권별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운용인력에 대한 전문성, 투자리스크 관리, 인센티브 구조 등에 대해 점검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을 통해 은행 자기자본투자 규제 현황 및 해외 사례 점검 등을 추진 중
108.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공공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및 전환계획 조사(7회), 정규직 전환 관련 자료요청 등 고용부 전환지침에 따라 충실히 협조하도록 독려(8회) <input type="checkbox"/> 금융공공기관별로 면담*하여 정규직 전환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 * 예보(10.13, 11.23) 예탁원(10.18), 주금공(11.20), 신보(11.23), 산은(11.27), 기은(11.27) ※ ‘18.1월말 기준 전환 대상 4,128명 중 427명 전환(10.3%)
109.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금융사용자협의회 복원 및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은행권 사용자대표와 금융노조 간 합의로 금융권사용자협의회 및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17.10.23)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10. 금융기관용 對도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안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도청 방어는 「국가기관의 도청 탐지·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민간 금융권의 경우 해당 소관부처(과기부·국정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금융기관용 對도청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p>
111.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통계자료 제출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요구기관(감사원, 국세청 등)에 따라 분류하여, 보완된 통계작성방법을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통계 작성 개선 방안을 향후 반영할 계획</p>
112.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하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 의견수렴('17.9~10월) 및 전산시스템 구축('17.12월)을 통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월부터 법집행기관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를 시행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법집행기관의 협조를 독려하고, 시스템 운영 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 개선
113.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라 금융서비스 축소, 불완전 판매,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점포 축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불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대상 행정지도* 실시('17.7~12)</p> <p>* ①대고객 안내 철저, ②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마련, ③경영 안정성 관리 강화, ④노동관계법령 준수 철저</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인가규제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 신설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 새로운 일자리 확충 추진</p>
114. 씨티은행의 대규모 인력감축 관련, 은행법 제8조의 인가 요건인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씨티은행의 인력감축은 「은행법」상 인가요건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금감원을 통해 씨티은행 점포 폐쇄기간 중 「은행법」상 경영지도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 실시 (금감원)
115.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열거주의 규정중심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규제의 신설·강화 시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금지)는 물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전허용-사후규제)의 가능성까지 검토하도록 제도화</p> <p>* 명시적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의 네거티브화, 사후규제화 등 5가지 기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제4조제2항)</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네거티브 규제개선에 대하여 자체 발굴은 물론 국조실,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와 협조아래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예정이며,</p> <p>○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하여 모든 규제 도입시 네거티브 규제 검토를 강화하고, “사전 규제완화와 사후 제재강화”를 위해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제정을 추진중</p>
116. 한화손해보험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확정과 관련, 유사 사안들에 대하여 점검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의 사업소장 등 영업조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p> <p>*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p> <p>○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 사안에 대한 점검 실시 여부 등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p>

금융감독원

2. 금융감독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신보 보증범위 초과분에 대한 은행의 추가담보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지급보증서 담보부 여신 취급 관행을 점검중에 있으며,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p> <p>※ 이와 별개로 '18.4월부터 신보를 포함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부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금융위)</p>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을 발표</p> <p>○ 동 방안 마련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반영하였음</p> <p>*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책임한정형 주담대를 정책모기지부터 단계적 확산,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연체부담 완화 등</p>
3.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채용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7.12월 및 '18.1월중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음</p> <p>○ 검사결과 확인된 채용비리 정황(5개 은행, 22건)은 수사기관에 이첩</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검사결과 확인된 절차상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관련 Best Practice 마련을 추진중</p>
4. 18세 미만 부적격자의 재형저축 부당 가입에 대해 점검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미성년자의 재형저축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징구·확인 등 은행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중*이며,</p> <p>* '18년 1분기 은행 내부감사협의제 주제로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의 적정성」을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실시중</p> <p>○ 점검결과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계좌를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참고) 현행 법규상 재형저축은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 등 연령에 대한 요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p> <p>*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p> </div>
5.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대출 당일 상환하는 경우 카드사별 이자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당일 대출·당일 상환시 1일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심사비용 보전 및 반복적인 단기 무이자 차입 예방이 목적으로</p> <p>○ 은행 등 타 업권 및 업계의 구체적인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18년 중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6. 신용카드 분실 시 이용하는 일괄 신고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및 업계와 논의하여 카드 분실 일괄 신고서비스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안내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음
7. P2P 업체의 연계대부업 등록이 의무화되는 2018년 3월 이전까지 대출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P2P투자시 주의해야 할 업체 유형 및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18.1월) ○ 차주의 복수대출 현황 등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 및 연장 시행('18.2월)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미등록 연계대부업자의 위법 행위는 P2P협회와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통보 <input type="checkbox"/> P2P연계대부업체의 P2P대출 영업행태·투자자보호 실태 조사 및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18.3월) ○ 이후에도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P2P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채권 추심의 적정성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
8. P2P 대출의 부동산PF 편중이 심각하며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주요 정보 누락 및 허위 광고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18.2월)시 부동산PF 공시항목*을 구체화하였고 *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용,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부동산 관련 대출은 투자한도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원금보장' 등 과장광고 여부, 부동산 PF 공시 사항 등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
9. 저축은행검사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금감원의 전결권 행사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조직관리규정을 개정('18.1.25.)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전결권을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상향
10. 카드로 연계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와 공동으로 발표('18.1.18.)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내용*이 포함됨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주요내용 ① 연체금리 인하 : “약정금리+3%” 수준으로 인하 (쏘 업권) ②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선택 보장 ③ 내부통제 강화 : 「연체금리산정 모범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 방지 </div>
11. 과도한 대출광고 등 저축은행의 고금리 가계대출 원인을 파악하여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18.2월 최고금리가 인하(연 27.9% → 연 24.0%)됨에 따라 최고금리 초과 기존 차주에 대해서는 자율적 금리인하*를 유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① 금리 24%~34.9% 대출 : 연체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대출약정기간의 1/2이 경과한 차주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24% 이내 대출로 갈아타기 유도('18.1.26. 시행)</p> <p>② '18.1.26.~2.7. 기간중 만기도래 24.0% 초과 대출 : 만기연장시 24.0% 이내로 대출 약정</p> <p>③ 최고금리 인하 전 편법 고금리·장기계약 체결 등 규제회피 여부 점검(8개사, '18.1.22 ~3.16.)</p> <p><input type="checkbox"/> 또한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 중</p> <p>* ①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MOU 체결('17.4월, 14개사)</p> <p>② 대출금리 구성체계를 은행권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중앙회의 표준규정 개정('17.7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인하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p> <p>○ 기존 차주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p> <p>○ 법정 최고금리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p>
12.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가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보다 보험료 인상 및 카드사 수익확대로만 이어지지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위해 카드·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17.9.26)</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p>하여 논의하였으나,</p> <p>○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입장차로 현시점에서 합의는 어려운 상황임</p> <p><input type="checkbox"/> 카드·보험업계간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가 합의되는 경우,</p> <p>○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및 카드 수수료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p>
13. 인터넷전당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인터넷 전당포*는 소규모 대부업자로서 지자체에서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p> <p>* 노트북, 휴대폰 등을 담보로 온라인을 통해 소액간편대출을 광고 또는 취급하는 온라인 기반 소규모 대부업자('16년말 기준 929개로 추정)</p> <p>○ 금감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인터넷 전당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음('16.6월, '17.11월)</p> <p>※ 서울시는 '16.8월 및 '17.9월에 IT 전당포 등의 위법·위규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금감원, 민생사법경찰단 및 자치구 합동)</p>
14. 인터넷상의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 內 불법모집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모집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처하고 있음</p> <p>* '17년 중 불법모집인 504명에게 과태료 부과조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모집이 포탈 내 카페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에 애로가 있으나</p> <p>* 카드모집인은 포털사이트(“카페”, “질의응답 코너”, “블로그”)에서 현금을 지칭하는 특수문자(★) 등 은어(隱語)를 통해 모집 게시물을 등재한 후 사이트 방문자와 은밀히 접촉하여 현금제공을 조건으로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가입신청서를 고객 대신 작성하여 카드사에 제출</p> <p>○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카드사로 하여금 「사이버 감시반」 운영*을 강화토록 할 예정</p> <p>* 카드사별 감시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경고성 댓글 등을 작성</p>
15. 금융기관이 관리중인 대출거래 제한자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완성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여신심사 시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은행연합회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18.1.22)」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p> <p>○ 여신금융협회도 「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18.3.1)」에 반영</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제7조: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여신 심사시 해당 차주의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p> </div>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내규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여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금융회사는 금년 중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p>
16. 카드사들의 고금리 대출 관행에 대해 시장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고금리 카드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대출 차주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p> <p>* 표준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18년 상반기 예정) 등</p> <p>○ 대출금리 산정·운영체계 합리화 관련 MOU(‘16.5월 체결)의 준수실태를 점검할 예정</p>
17. 군입대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감액 또는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개선안 마련 및 업계 지도완료*(‘17.12월)</p> <p>* 보험사별 내규·시스템 개정 예정(‘18.상반기)</p>
18. 보험가입 후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의 건강관리에 따라 보험료 감액(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마련*</p> <p>* ‘17.12.8. 행정지도 시행</p> <p>※ 약 15개 보험회사가 ‘18년중 상품 출시를 준비중(‘18.2월말 기준)</p>
19.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 도입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11개) 보험회사가 대체 부품 사용 특약* 도입을 완료(‘18.2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자차 담보 보험 수리 때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반환</p>
20.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p> <p>○ 소비자가 통지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직업별 위험등급을 공시토록 지도('17.11월)하고,</p> <p>* 회사별 시스템 개정 예정('18.상반기)</p> <p>○ 소비자가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절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강화(표준약관*에 반영 완료)</p> <p>* '18.4월 개정 표준약관 시행 예정</p>
21.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 대리청구 제도 등 장애인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한 기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 등으로 보험금 자력청구가 불가능한 소비자의 원활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대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18.상반기)</p> <p>* 보험가입시 대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 강화 및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한 주기적 소비자 안내 실시 등</p>
22. 중단된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조속히 재개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사망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17. 12월), 향후에도 동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보험사가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망에 등재된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직접 발송(약 213만 건)</p>
23.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차량이력 정보(카히스토리)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정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전손 차량 정보 수정 승인절차*를 마련('17.12월)</p> <p>* 전손차량을 분손차량으로 변경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가 임의로 해당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게 차단</p>
24.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1차 손해배상책임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p>
25.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입증책임을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 등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p> <p>○ 자문결과 등을 감안하여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p>
26. 치매보험의 보상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치매보험 보장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장범위의 비교공시, 가입시 보장 범위 및 지급기준 안내강화 등 추진('18.상반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7. 해외 여행자보험과 관련하여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이 지나치게 엄격 하거나 까다롭지 않은지 점검할 것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해외 여행자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18.상반기)
28.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유병력자 및 경증만성질환자도 실손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용 상품*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18.4월부터 해당 상품 출시 예정 * 심사대상기간 축소(과거 5년→과거 2년) 등 심사요건 완화 및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자기부담률(30%) 설정 등
29. 보험사의 민원 수용률 제고 및 의료지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보험사의 민원 수용률 제고를 위해 '18년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민원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 * 민원처리 조직 및 인력,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점검 ○ 또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 하기 위해 분쟁 빈발 원인을 분석 하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지속적 으로 추진 * 통원치료비 지급 관련 분쟁발생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input type="checkbox"/> 의료자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견제장치로 보험회사 의료자문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17.7월부터 분기별로 공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을 추진 중 *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등
30. 보험 민원 1위, 민원 불수용 1위, 의료자문 1위인 삼성생명·삼성 화재의 보험지급 적절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 필요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삼성생명·삼성화재 검사시 보험금 지급 적절성을 점검할 예정
31. 변액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상품요약서 등에 보험료 납부액, 사업비액, 해약손실액, 손실률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 보험용어 개선으로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변액보험 안내내용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 생보협회는 이에 따라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 강화 및 홈페이지 개선을 실시할 예정('18.상반기)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변액보험 외에도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상품요약서 등 보험 안내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상품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적극 개선(변경권고)할 예정(연중 실시)
32. CJ그룹의 보험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CJ그룹 보험계약 관련 3개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업법 위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17.12월) 하였으며,</p> <p>○ 현재 해당 대리점 및 설계사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p>
33. 자본시장법상 유상감자 승인 요건에 “감자의 불가피성”을 추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유상감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령상 자본감소 승인 요건에 ‘자본감소의 불가피성’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의견을 금융위에 개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금융위의 법령 개정 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예정</p>
34. 자베즈파트너스의 현대증권 인수 관련 이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검사 실시를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자베즈제1호PEF를 운용한 자베즈파트너스(GP)의 부당투자권유 등 위규혐의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18.1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검사결과 확인된 자베즈파트너스의 위법 혐의에 대해 법률검토 등을 거쳐 적의 조치할 예정임</p>
35.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보고서의 객관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17년 도입한 괴리율 공시 및 내부검수 강화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점검결과 확인된 미흡사항 등을 업계에 전파하여 개선을 유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괴리율 공시의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사 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를 지속 추진</p>
36.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7.7월 증권사를 대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여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 중</p>
37. 자사주 취득 한도인 배당가능 이익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의 배당가능이익 산출 현황 파악,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시강화 방안 등 검토</p>
38. 기업 재무공시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도입을 금융업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업종에 대한 XBRL 확대적용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추진방향을 논의*</p> <p>* 금감원 외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법인 등 10개사가 참여('17.9~12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8년중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XBRL 활성화, 금융업종 및 주식사항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대한 XBRL 확대적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39. 상장기업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17년도 사업보고서상 임원보수 관련 기재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 임원보수 관련사항 기재충실화 유도 등 공시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
40. 법무법인 원 구성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법무법인 원 구성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조사에 대하여 처리절차 진행 중
4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감사인 지정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시행령·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17.10.12.) *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전문가 등 ○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안을 포함한 외부감사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논의 중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금융위 규정 개정안 마련 예정* * 금융위는 '18.3월말까지 외감법 시행령, '18.5월중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42. 케이티엔지의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 투자 관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감리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외감법상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감리실시 사실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43.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외감법상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감리실시 사실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4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 관련 부당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5. 교통사고 가해자 요청에 의한 검사프로그램(마디모)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남용을 방지할 것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마디모의 신청 요건 강화 등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 보험회사의 마디모 남용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보험회사의 마디모 남용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유의사항 공문 발송('17.8.8)</p> <p>※ 마디모는 교통사고 가피해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금감원이 신청요건 등을 변경하기는 어려움</p>
46.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위해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IT리스크 관리실태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안 강화를 지도 중</p> <p>○ IT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 중점 검사*를 수행</p> <p>* '17.10~12월중 6개사</p> <p>○ 전자금융보조업자(CD-VAN사 등)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권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통보(11월)</p> <p>○ 스마트폰 앱 보안조치 미흡회사에 대한 보완조치를 지도(12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금융권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 점검·지도해 나가겠음</p>
47. 차명주식거래 등 직원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주식거래 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6.11.30.부터 임원 및 국실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반 직원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된 수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추후 노동조합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내부통제를 보완할 예정</p>
48. 공개하지 않았던 금감원 직원의 징계사실을 조속히 공개하고 징계 내용 공개방안을 강구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에 준하여 금감원 직원의 징계사실 대외공개를 추진 예정</p> <p>※ '18.2월부터 대내 게시판에는 직원 징계사실을 공개하고 있음</p>
49. 금융위·감독원 출신 퇴직자가 직원채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로비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18.4.17. 시행예정)</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시범실시를 거쳐 '18년 상반기 중 본격 실시 예정</p>
50. 이견회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재점검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이견회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실시('17.11월)</p> <p>○ 점검결과를 '18.1.3. 국회(이견회 차명재산 과세 TF)에 보고하였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51. 농해수위 국감에서 제기된 농협은행의 사기분양 대출 의혹을 점검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요청('17.10.26.)하였고, 금감원은 중도금대출 관련 민원사항도 함께 점검하도록 지도('17.11월)</p> <p>○ 농협은행 감사 결과, 송도센트로드 관련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내부규정 위반 및 하자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17.12.15. 감사결과 보고)</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동 PF대출 정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민원 등을 통해 중도금대출 관련 불법추심 등의 문제점이 입증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p>
52. 대주주 회사 출신 전직 임원들이 출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18.3.15. 입법예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음</p> <p>※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상근 임직원·비상임 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비상임이사이었던 자를 추가(법 개정안 제6조1항3호)</p>
53.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p> <p>○ 간편송금(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거래 현황 등의 업무보고체계를 강화하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p>
54.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 불만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p> <p>○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각 금융상품들의 특성을 감안한 미스터리 쇼핑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p> <p><input type="checkbox"/> '18년중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은행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편의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p>

예금보험공사

3. 예금보험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 PF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업권의 자영업자대출 · PF대출의 특성 및 현황과 잠재리스크 요인을 심층 분석('17.12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상기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대출 및 PF대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 자산건전성 추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p>
2. 가계부채 급증 및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7년 중 조사·검사(11회) 및 경영진 면담(20회) 시 가계부채 급증 및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권고*</p> <p>* (사례) '17.9월 △저축은행 조사시 개인신용대출 급증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권고</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p>
3. 비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연 1회 공동검사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검사 확대방안을 적극적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의 연간 검사계획 수립에 앞서 2018년도 공동검사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조기에 실시('17.11월)하였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으로 강구할 것	<p><input type="checkbox"/> 공식 협의채널인 '공동검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검사 활성화를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18.1월)하는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비저축은행업권의 경우에도 취약 금융회사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공동검사를 요청할 예정</p>
4.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예금보험료율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투업권의 리스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예보료율을 既 인하*한 바 있음</p> <p>* '07년 증권금융 별도예치금에 대한 예보료율 30% 인하 및 '09년 목표기금제 도입시 0.05%p 인하(0.20%→0.15%)</p> <p><input type="checkbox"/> 현재 금투업권은 목표기금의 상한에 도달하여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담분만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부담하는 예보료율은 0.0675%*로 은행(0.08%)보다 낮은 수준**</p> <p>* 금투업권 예보료율(0.15%) × 저축은행 특별계정 납부분(45%) = 0.0675%</p> <p>** 증권금융 별도예치금의 경우 동 예보료율에서 30% 추가 인하여 0.04725%</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투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예보료를 조정에 대해서는 업권 리스크 수준,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정책당국과 신중히 협의할 계획</p> <p>* 금투업권의 예보료를 인하하는 경우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 부담을 타 업권으로 전가하는 효과 발생</p>
5. 우리은행 매각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잔여지분의 조기 매각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사 보유 우리은행 잔여지분('17.12월말 기준 18.43%)에 대하여 시장상황 등 매각 여건 점검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공사 보유 우리은행지분의 매각은 공자위 논의를 통해 추진</p> <p>○ 잔여물량 규모, 주가, 투자 수요 등 매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추진 예정</p>
6.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소수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서울보증보험 매각을 위해 보증보험시장 개방 이슈 등 매각 관련 쟁점사항, 시장상황 및 매각 여건 점검 중</p> <p>○ 한편, 매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매년 적정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제고 노력을 지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서울보증 민영화는 서울보증의 공적기능수행, 금융산업발전, 공적자금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이므로</p> <p>○ 전문가, 공자위 등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p>
7.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에 대한 정리를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연체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체채권 중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은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회수실익이 없는 장기 연체채권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p>
8. 미국의 금융안정협의회(FSOC)와 같이 법률적 근거를 가진 범정부 금융안정 협의체 구성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미국 FSOC 등 해외 주요국의 금융안정협의체 운영 현황을 조사 중이며,</p> <p>○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학계와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한국경제학회('17.2월) 및 은행법학회('17.11월) 학술대회에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필요성을 논의</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안전망기구간 정책공조 및 정보 공유 강화 관련 효과적인 체계 마련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
9.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는 은행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비대면거래에 맞는 표시설명확인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비대면거래시 예금보호 여부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예금보호로고를 '17년중 인터넷전문은행 및 시중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 사용토록 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비대면거래 증가 등 변화에 맞춰 향후 부보금융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의 표시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할 계획</p>
10. 초대형IB의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금융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관련 상품설명서와 홍보물(팝플렛, 신문광고, 포스터) 등에 표시토록 조치하였음('17.11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부보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발행어음 등을 판매할 경우 예금자보호 여부를 설명·확인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1.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예금보호한도의 업권별 차등화 및 주기적 재검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에 따라, 보호한도 관련 해외 사례 등 조사중</p> <p>* '16.12.30, 김선동 의원 발의</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호한도 조정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당국과 신중히 협의할 계획</p>
12. 차등보험료율제 차등폭 확대 및 차등 등급 세분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등급별 차등폭은 현행 $\pm 5\%$에서 2021년 $\pm 10\%$로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등급 개수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음</p>
13.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을 포함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도입하여 대형은행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혈세투입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국내 대형은행(D-SIB)과의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계기관, 이해 관계자 및 시장전문가 의견 수렴 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도입방안 마련 예정
14. 미국 연방금융기관감사심의회(FFIEC)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제수준의 정보공유체계를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정보공유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금융안전망기구간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등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정보공유의 당위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외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책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개선 협의를 추진할 계획
15. 예금보험위원회 안전제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위원회 안전제목은 '17.10.31일부터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였음 * (기존) 제목 비공개 → (개선) xx은행 공동검사
16. 민원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17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연초에 계획된 감사 이외 민원 등으로 인한 조사결과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동 보고서는 이사회 등에 보고하였음('18.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이와 같이 보고할 계획임
17. 은닉재산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고 포상금 한도(20→30억원) 및 지급률 상향 방안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급한도 및 지급률 상향 방안 마련 후, 법원 파산부 등 이해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
18.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에 합법적인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건물가치를 정상화하고, 공매를 통해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공사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 소송 등 파산재단 보유 PF사업장의 매각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매각 가치를 제고하고 있음 ○ 매각 장애요인이 해소된 사업장은 일괄공매(Grand Fair, 연4회 실시) 등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을 조기 회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7년중 일괄공매 등을 통해 5,889억원 회수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명도소송 등을 통해 매각 장애요인을 적시에 해소하고, 신속한 자산매각을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9. 부실을 막기 위한 예보의 단독 조사 요건 완화,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권한 강화 등 예보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단독조사의 경우 완화된 요건에 따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p> <p>○ 타 업권의 경우 공동검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부실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아울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 등을 검토 중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공사 역할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정책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p>
20.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경우 공적 자금 회수를 산정 기준을 바꿔 회수성과를 부풀린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자금 지원액 27.2조원 대비 41.5%인 11.3조원을 회수('17.12월말 기준)</p> <p>○ 이는 저축은행 파산 당시 회계법인이 추정한 회수가능액 9.7조원 대비 116% 수준</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부실저축은행 보유 자산의 매각 및 환가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향후에도 매각여건 및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회수방식 발굴, 적극적인 마케팅 실시 등 지원 자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21. 파산재단 자산의 신속한 환가 등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장기미매각 자산 일괄매각 추진, 캄보디아 등 해외자산 현지 회수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아갈 파산배당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자산유형별 맞춤형 매각, 매수수요 발굴 등을 통해 회수를 증대하고,</p> <p>○ 파산재단 운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p>
22.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위험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특정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 시스템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IADI) 권고*, 해외사례 및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금수취기관(은행, 종금, 저축은행)에 시스템을 우선 도입 중</p> <p>*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핵심준칙을 통해 예금수취기관에 제도 도입 권고</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예금수취기관(은행, 종금, 저축은행) 외의 보험등 업권은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23.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보상품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일부 금융 투자회사를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파산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보호 및 보호대상 금융투자회사 확대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 조사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외 사례 및 제도 도입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당국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p>
<p>24. 초대형IB 부실방지 및 기금손실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초대형IB를 포함한 공동검사대상 후보회사 명단을 통보하여 협의 진행 중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초대형IB 부실예방을 위해 금감원과 검사 대상회사, 검사 시기 등 협의 후 공동검사 실시 예정</p>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복지카드 사용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직원 해외여행 행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복지카드 신규 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3월 중) 직원 해외여행 등 혜택은 전면폐지하고</p> <p>○ 계약체결 후 복지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적립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p>
2. 채권추심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방지를 위해 CA사(신용정보사) 수수료 및 CA사 관리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불법·과잉추심 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체계 개선*, 중간평가제도 개선**, 음부즈만 제도 도입 등 실시 중 ('17.1월)</p> <p>* 기존 성과수수료를 기본성과약정 등 3개로 개편 ** 중간평가시 성과위주 항목 개선 (개선) 회수실적 축소(60→30점), 약정·유지 상황 (10→25점) (신설) 고객응대(15점), 불법·과잉추심방지 (15점), 개인정보 보호(10점), 업무지원 충실도(5점)</p> <p><input type="checkbox"/> 불법·과잉 추심 방지를 위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개선('17.1월)</p> <p>○ (불법추심 제재 강화) 불법추심 2회 반복시 계약을 해지하고 3년간 입찰 참가에서 제외하는 'Two-strike out' 제도 도입</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인센티브·페널티 개선) 민원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차등(2~0%) 지급, 불법추심 적발시 페널티 (-2%) 부여</p> <p>○ (표준 안내장 제작) 채무고객의 만족도 제고 및 과잉추심방지를 위한 표준 안내문 마련</p> <p>○ (음부즈만 제도 도입) CA사의 과도한 추심행위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음부즈만 제도 시행</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2017년도 제도개선 내용 분석을 통해 불법·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p>
3. 비위행위로 직원이 구속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시 휴직명령제도 도입 등 자산관리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급여환수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인사규정 개정(2017.12.22.)</p> <p>○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무급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비위행위로 직원 구속시 명령휴직시켜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하겠음</p>
4. 공사 직원 등의 국유재산 불법매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매각 절차별 전산시스템과 연계 강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하여 절차별 적법한 진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매각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 전담직원제 운용('17.8.28), 인감증명서 발급관리 강화('17.9.8), 대법원 등기 알람서비스 도입('18.1.26) 하여 실시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및 연계테스트 완료하였으며, 국토부와 협의 후 '18.3월중 오픈 예정</p>
5. 중소기업을 위한 자산매입 후 재임대 (sale and lease back)지원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7년 총 9개사 자산을 인수(1,120억원)하여 재무구조개선 및 고용유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3개사 659억원) 대비 인수실적 70% 증가하였으며, 제도시행('15.5월) 이후 신청 및 지원규모 꾸준히 증대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17.12.18.)에 따라 회생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신설 및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 적극 발굴 ⇒ '18년에는 1,500억원 규모 지원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중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30~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제도 시행 중</p> <p><input type="checkbox"/> (제도 개선 내용)공사는 금융위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성실상환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신용카드 발급 확대 방안 마련('17.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월 성실상환자에 대한 150만원 한도 신용카드 추가 발급 예정 <p><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th><th>개선(안)</th></tr> </thead> <tbody> <tr> <td>[24개월] 50만원 한도 카드 발급 [30개월] 최대 100만원 까지 확대</td><td><좌동></td></tr> <tr> <td><신설></td><td>[36개월] 최대 150만원 까지 확대</td></tr> </tbody> </table>	현행	개선(안)	[24개월] 50만원 한도 카드 발급 [30개월] 최대 100만원 까지 확대	<좌동>	<신설>	[36개월] 최대 150만원 까지 확대
현행	개선(안)						
[24개월] 50만원 한도 카드 발급 [30개월] 최대 100만원 까지 확대	<좌동>						
<신설>	[36개월] 최대 150만원 까지 확대						
7.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특히 국유재산관리사업의 평가실적 저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경영평가 목표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별 점검채널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p><input type="checkbox"/> 2017년 국유사업부분의 경영평가 계량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향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 계량 실적 득점 현황 ></div> <table><tr><th>구 분</th><th>배점</th><th>득점</th><th>달성율</th></tr><tr><td>'16년</td><td>17점</td><td>15.3점</td><td>90%</td></tr><tr><td>'17년(예상)</td><td>16점</td><td>15.59점</td><td>97.4%</td></tr></table>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div><input type="checkbox"/> 경영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고도화</div><div><div>○ 각 성과지표별 점검채널 및 시기, 점검내용을 확대하여 경영평가 실적 제고</div></div><div><input type="checkbox"/> 경영목표(계량)의 부점평가 목표 연계 강화</div><div><div>○ 계량실적의 만점 달성을 위해 경영평가 지표를 12개 지역본부 등 부점평가 목표에 반영</div></div></div>	구 분	배점	득점	달성율	'16년	17점	15.3점	90%	'17년(예상)	16점	15.59점	97.4%								
구 분	배점	득점	달성율																		
'16년	17점	15.3점	90%																		
'17년(예상)	16점	15.59점	97.4%																		
8. 미활용·무단점유 국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div><처리결과></div> <div><input type="checkbox"/> (무단점유 집중 해소) 유형별 관리강화로 매년 무단점유 비율 감소</div> <div><연도별 무단점유 현황></div> <table><tr><th>연도</th><th>관리필지(a)</th><th>무단점유(b)</th><th>비율 (b/a, %)</th></tr><tr><td>'14년</td><td>621,364</td><td>99,583</td><td>16.0</td></tr><tr><td>'15년</td><td>620,536</td><td>98,051</td><td>15.8</td></tr><tr><td>'16년</td><td>620,745</td><td>76,006</td><td>12.2</td></tr><tr><td>'17년</td><td>626,038</td><td>62,734</td><td>10.0</td></tr></table>	연도	관리필지(a)	무단점유(b)	비율 (b/a, %)	'14년	621,364	99,583	16.0	'15년	620,536	98,051	15.8	'16년	620,745	76,006	12.2	'17년	626,038	62,734	10.0
연도	관리필지(a)	무단점유(b)	비율 (b/a, %)																		
'14년	621,364	99,583	16.0																		
'15년	620,536	98,051	15.8																		
'16년	620,745	76,006	12.2																		
'17년	626,038	62,734	10.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 <div> <input type="checkbox"/> (미활용 국유지) 유휴재산 입찰 대부 및 매각 활성화 </div> <div>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고</th> <th rowspan="2">17년 성과</th> </tr> <tr> <th>16년</th> <th>17년</th> </tr> <tr> <td>대부입찰</td> <td>577건</td> <td>874건</td> <td>712건(27억원) 계약체결</td> </tr> <tr> <td>매각입찰</td> <td>2,656건</td> <td>3,303건</td> <td>2,839건(1,344억원) 계약 체결</td> </tr> </table> </div> <div> <div><향후 추진 계획></div> <div> <input type="checkbox"/> (무단점유 집중 해소) 무단점유 비율 대폭 축소 <div> <div>○ 통계분석을 통해 무단점유 현황을 유형화하고 점유 유형별로 단계적 해소를 위한 Action Plan 마련</div> <div>○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div> </div> </div> <div> <input type="checkbox"/> (미활용 국유지) 계속적인 유휴재산 입찰 대부 및 매각 활성화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 </div> </div> </div>	구분	공고		17년 성과	16년	17년	대부입찰	577건	874건	712건(27억원) 계약체결	매각입찰	2,656건	3,303건	2,839건(1,344억원) 계약 체결
구분	공고		17년 성과												
	16년	17년													
대부입찰	577건	874건	712건(27억원) 계약체결												
매각입찰	2,656건	3,303건	2,839건(1,344억원) 계약 체결												
9.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에 대한 재임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div> <div><처리결과></div> <div> <input type="checkbox"/> 안전진단 재 실시 결과, 옥상층 폐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C등급 판정받고, 현재 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용역 중 <div> <div>○ 안전진단 재 실시('18.1.26)</div> <div>○ 안전진단 결과('18.2.22) <div> <div>- 옥상층 사용 시 : E등급</div> <div>- 옥상층 폐쇄 후 미사용 시 : C등급</div> </div> </div> <div>○ 공사설계를 위한 현장 점검('18.2.26)</div> </div> </div>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설계용역 완료('18.5월 중순)</p> <p><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 승인 후 보수공사 완료('18.7월 중순)</p>
10. 바뀐드림론 제도의 실효성 및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7.1.1. DSR(소득 대비 총부채상환 비율) 심사 강화*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6%(540억/969억) 수준으로 실적 감소</p> <p>* '16년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른 개선(총부채상환액 산정 시, 기타부채 <u>이자</u> 상환액 → 기타부채 <u>원리금</u> 상환액)</p> <p><input type="checkbox"/> (실적 증대 방안) 연소득 기준을 500만원 상향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17.3.31), DSR 승인 기준 상향*(40% → 60%) 등 보증 심사기준 합리화 실행('17.8.30)</p> <p>* (변경전)'17년 1월~8월 월평균 지원실적 57억원 (변경 후)'17년 9월~12월 월평균 지원 실적 77억원(35%상승)</p> <p><input type="checkbox"/> (신규 보증상품 출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됨에 따라 대출심사 강화로 인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중금리 신규 보증상품** 시행 중</p> <p>* 27.9% → 24%(2018.2.8. 시행) ** 안전망 대출(2018.2.8. 시행, 대출금리 : 12~24%)</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물납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재매입 방지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법 개정('18.1.31)</p> <p>○ 국유재산법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물납주식의 처분 제한을 물납자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국유재산법 개정 조문 일부> 제44조의2(물납증권의 처분제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인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납가액 보다 적은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p> </div>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p> <p>○ 국유재산법 제44조의2 신설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p>
12. 행동강령상 제한된 임직원의 주식거래 등에 대해 현황 파악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현황에 대해 개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p> <p>○ 공사 업무 관련 PC에서는 원천적으로 거래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p> <p><input type="checkbox"/> 공사 업무 관련주식 거래 여부를 일제 점검('17. 10월)한 결과 부정적인 거래사실 미발견</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통화까지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p> <p>○ 향후 임직원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적정한 주식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자체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 예정</p>
<p>13. 차세대 온비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구축·운영까지 자체감사를 통한 책임 소재 규명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 온비드 시스템의 오류 등은 공사 TFT에서 지속 대응하여 입찰, 개찰 등 일반적인 기능은 정상 운영 중이며</p> <p>○ 조달청이 선정한 용역업체(대교 & 딜로이트)의 계약불이행 관련 사항은 소송 진행 중</p> <p>* 외부 감리법인 감리결과 부적합 판정('16.6월),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17.8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절차 종료('17.12월)</p> <p><향후 추진계획></p> <p>□ 위 내용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공사의 문제점 발견 시 내부감사의뢰 등 별도의 조치방안 검토</p> <p>○ 그 외 기획·운영 등 관련 사항은 자체 정기감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 예정</p>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전세보증 취급요건을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2억원으로 구분한 현행 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지역별 전세값 동향을 면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의 연내('18년) 도입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할 예정</p>
2.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사회적배려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파산·면책자에 대하여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17.8월)</p> <p>○ 다만, 사유발생일부터 5년경과 시까지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공공정보로 등록·관리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p>
3.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보증한도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한도 상향*을 기초치('17.9월) 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접점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 유지하고 있음</p> <p>* 25백만원 → 30백만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지원자를 비롯한 특례 보증 지원대상자를 신규 발굴하고, 취약 계층 보증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p>
4.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거절 비율이 높으므로 서민주거 안정 이라는 공적보증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보증이용률 제고를 위해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 재정비 추진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대상 정책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접점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추진을 통해 특례보증 도입 예정</p> <p><input type="checkbox"/>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은 소득 제한으로 인해 정책보증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개선할 계획</p> <p>*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은 높을 수 있으나, 결혼 초기 임차보증금 수준의 금융자산 형성이 어려운 경우 등을 감안할 필요</p>
5. 전세 이용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반환보증 도입을 검토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전세금반환보증은 공사의 이행성 보증사업 진입여부에 대한 정책결정 및 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6. 전월세 매치제도 도입 등 서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협약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개발 및 운영</p> <p>○ (신혼부부)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금리인하 전세자금보증 운영(17.10월~)</p> <p>○ (청년층) 지자체* 협약을 통해 금리 이차보전 전세자금보증 운영</p> <p>*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양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수요자 맞춤형 신규 협약 전세 자금보증 확대</p> <p>○ 협약체결기관(지자체·금융기관) 확대 및 기 운영 중인 상품의 요건 완화 등 상품성 개선 예정</p>
7. 비소구대출 활성화 및 시중은행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비소구 디딤돌대출 적용대상을 확대 (소득 3천만원이하 → 5천만원이하) 하여 공급 중(17.12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내 비소구대출을 보증자리론으로 확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격대출 등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예정</p> <p>○ 보증자리론 도입 시는 상반기 중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8.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부채의 리스크 조절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제2금융권 구조개선을 위한 보증 자리론 출시는 10.24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관련 사항을 관계부처 및 제2금융권과 협의</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상반기 내 출시 예정</p>
9.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그동안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을 단축시켜 왔음</p> <p>○ 2%(5년 이내) → 1.5%(3년 이내) → 1.2%(3년 이내)</p> <p>○ 공사는 시중은행(1.4% 수준) 대비 0.2%p 낮게 운영하고 있음</p>
10. 일시적 2주택자 중 투기목적의 정책모기지 이용자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투기목적의 2주택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제도”를 '17년 중 두차례 개선</p> <p>○ 처분기간경과 후 가산금리를 신설 ('17.1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처분기한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17.9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투기목적의 정책모기지 이용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예정</p>
1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가입요건 완화 등 상품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요건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 도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4월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p> <p>* 예)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을 완화 적용 검토</p>
12. 보금자리론 대출이 아파트에 편중된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금자리론이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보금자리론의 주요 이용자가 인터넷에 익숙하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은 40대 이하가 대부분(84%)이기 때문임</p> <p>○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3.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소득이나 주택 외 다른 자산이 많은 사람의 가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소득과 자산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가입대상이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소득·자산 수준을 확인하는 복잡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보다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18년 상반기)</p>
14.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법무사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신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입자가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법률자문('17.11월)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p> <p>○ 주택연금은 수지상등의 원리에 따라 설계된 점을 고려시, 법무사 수수료 등 근거당권 설정 부대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월지급금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제도가 불공정 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임</p> <p><input type="checkbox"/> 고객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 등기제도 도입으로 법무사수수료를 기존대비 45% 인하(30→16만원)('18.1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법무사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이나 월지급금 감소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향후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법무사수수료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
15.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8년부터 감소하고, 2020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한 가입자 부담완화 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공사는 등록면허세 면제 필요성을 소관부처(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으나, 현재 행안부는 부정적 답변임
	<input type="checkbox"/> '18년부터 등록면허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감소되는 것에 대응하고자 저당권설정 채권 최고액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17.11월)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관련 의견 수렴 시 적극 대응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등록면허세 부담이 기존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할 예정
16. 주택연금 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인하 및 해지 시 이자부담을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고정금리상품의 도입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보증료를 인하 시 월지급금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보증료를 인하 대신 현재 대출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를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가입초기에 발생하는 선순위대출 상환목적의 개별인출금과 초기 보증료를 유동화 방식으로 공급 (고정금리 MBS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고객이 초기보증료를 직접 현금납부 가능한 보증료 체계개편(안) 검토
	<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 유동화 허용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 예정
17. 주택연금 가입연령 요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허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등 수요확대 및 가입자 편의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관련 공사법 개정안 검토
	<input type="checkbox"/>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관련 TF 운영 ('17.10월)하고 있으며, 신탁방식 도입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 검토
	<input type="checkbox"/> 가입연령 완화에 따른 월지급금 및 수지 분석 진행('18.1월)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공사법(주거용 오피스텔,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공사법 시행령 (가입 연령 완화) 개정 추진 예정
18.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 상환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인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인출 한도를 현행 70%에서 90%로 확대 할 수 있도록 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p>
19.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후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2015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각 지사 고객 상담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 홍보 인쇄물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박람회 등 현장 상담 시 적극 안내할 계획</p>
20. 주신보계정에서 주연보계정으로의 전출 허용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주신보기금의 금융기관 출연체계 개편(주신보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주택연금 계정에 출연) 검토</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p>
21.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 및 수급액의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과도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수도권 편중과 수급액 차이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기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input type="checkbox"/> 주로 지방인 경우가 많은 저가주택 (1.5억원 이하) 보유자에게 월지급금을 최대 17%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 중('16.4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원격지 화상상담시스템 도입운영, 지사 및 출장소 확충건의</p> <p><input type="checkbox"/>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계획</p>
22. 정책모기지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를 위해 정부출자 확대 및 출자구조다변화 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8년 예산에 출자 900억원 반영</p> <p><input type="checkbox"/> '18~22년 중기사업계획에 출자 요청('18.1월 제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9년도 예산안에 추가 출자 반영 요청 예정</p> <p>○ 안정적인 유동화 사업을 위해 추가 출자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예정</p>
23. 해외연수 중인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외 연수파견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검토 및 시행 예정 ('18년 상반기)</p>

신용보증기금

6. 신용보증기금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보증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성장단계별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운용으로 고용의 양적 확대는 물론 고용 안정 등 질적 향상도 유도</p> <p>* 고용창출기업 보증공급 실적(조원): ('15) 3.5 → ('16) 2.4 → ('17) 4.6</p> <p>○ ‘청년희망드림보증’, ‘新중년행복 드림보증’,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p> <p>* 청년희망 / 新중년행복 드림보증 : 만 17세 ~39세 / 만 49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 우대보증</p> <p>** 청년고용기업 보증 :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별로 지원하는 보증</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8년 고용창출·유지기업에 4조원*을 공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p> <p>* 지원목표(조원) : ('17) 3.4 → ('18) 4.0 (0.6↑)</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 고용 안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 역량 평가 도입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은 보증지원시 우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p>
2.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실태조사 결과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은 신보가 아닌 타기관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확인(신보는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없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재기지원 제도 적극 운용</p> <p>○ 신보는 KIKO사태 관련 구상권 기업에 대해 과도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p> <p>○ 불가항력적 금융사고와 관련된 구상권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인 채무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할 계획</p>
3.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7년 창업전담부서(4.0창업부)와 스타트업지점(8개)을 설치하고,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Start-up NEST’를 구축하여,</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선정 - 액셀러레이팅 - 금융지원 - 성장지원」 4단계 지원을 통해 유망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 □ KOTRA와의 협업으로 액셀러레이팅 과정 이후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추가적인 비금융 지원방안 마련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창업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KOTRA, 해외연계 액셀러레이터 등과 지속적인 협업 추진 ○ KOTRA와 협업을 통해 ‘슬러쉬 (SLUSH)* 2018’ 한국관에 신보의 유망창업기업 참가 예정 <p>* 핀란드 헬싱키에서 11월~12월에 개최되는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p>
4. 중소 조선사 대상 RG 보증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증액 및 등급 조정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보증한도 및 등급별 지원한도를 상향 ('17.11월) ○ 기존 보증의 한도(70억원)와는 별도로 RG특례보증 한도(70억원)를 운용* 하여 보증한도를 상향 <p>* (개정 전) 기존 보증 + RG특례보증 : 70억원 →(개정 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기존 보증(70억원) + RG특례보증(70억원) : 140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등급별 보증한도 사정 시에도 기존 보증은 제외하여 지원한도 상향* <p>* RG특례보증으로만 별도 등급별 한도 부여 : K1 (70억원), K2 (60억원), K3 ~ K8 (50억원), K9 ~ K13 (30억원)</p>
5. 퍼스트뱅크 기업 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목표 미달성시에도 Credit Line 재설정을 통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완료('17.11월) ○ 추정매출액 재산출을 통해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연차별 지원조건을 완화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6.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 부실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 (책임경영심사) 대표자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 ○ (투명경영이행 약정) 보증지원 시 법인대표자와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을 유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자금이 적정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p>
7. 정책금융 본연의 업무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정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자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은 곤란 <p><input type="checkbox"/> 다만,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인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 창업 단계부터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상품을 운용하는 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대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시장안정 P-CBO보증의 운용기한을 '17년으로 종료하여 정책지원역량을 중소기업에 집중
8.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직 신설 및 인력 파견 등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국내 최초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해외진출지원보증 및 인력 파견 추진</p> <p>* 신한-신보 글로벌 사업 공동추진협약('17.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해외진출투자자금 등 대출·Stand-by L/C 보증 지원('18년 上)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베트남(신한베트남본점)에 신보 직원 파견해 보증 업무 수행('18.3월)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증수요 및 공급 상황을 보며 대상 국가 확대, 조직신설 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영하되 필요시 적극 확대
9.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비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보증부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히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및 범위 검토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와 업무처리방안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 진행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감사실, 준법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기준 개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춰 제도 마련
10.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과 제조업 등 주력사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 중심으로 창업국가 조성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는 총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투자 <p>* 창업기업 투자(억원) : ('16년) 175 (50.0%) →('17년) 278 (69.5%)</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발의</p> <p>○ 투자총액한도를 확대하기(자본금의 10%→20%) 위해 신보법 개정 발의*</p> <p>* 자유한국당 김선동의원 발의('17.04.03)</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혁신창업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중점 지원</p> <p>○ '18년도는 보증연계투자와 투자 옵션부 보증을 전년 대비 3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으로 운영</p> <p>* 보증연계투자 400억원, 투자옵션부보증 600억원 (전년대비 300억원 증액)</p> <p><input type="checkbox"/> 법 개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계획</p>
11.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보 40창업경진대회, 희망창업아카데미 등)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완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2.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한 기업이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매각 전에 실패기업주들에 대한 재기지원 보증 공급을 강화</p> <p>○ 회수 및 재기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매각심사를 강화하여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재기지원보증 공급을 영업조직의 핵심성과지표로 운용</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재기지원보증 공급 확대 노력과 함께 캠프와 개별채권 매각 협상 시, 재기지원보증 지원을 개별업체 환매사유(매각 취소)에 포함</p> <p>○ 「매각계약서」 상 채권별 환매 사유에 “실패 기업주가 신보의 재기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을 추가 하도록 캠프와 협의할 계획</p>
13.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 대출·보증의혹에 대해 소상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7.10월 해당영업조직에 대한 종합 감사 실시를 통해 신용조사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p> <p>○ 감사결과 취급과정에서 고의적인 특혜성 지원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담당팀장 및 담당자에 대해 감사처분을 실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4. 마포사옥을 보육, 컨설팅, 금융 등 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혁신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기업들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 ‘마포혁신타운(가칭)’ 추진 확정('17.9월) 및 후속 조치 진행 중</p> <p>○ 금융·비금융 윈스톱 지원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판교, 강남을 잇는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청년일자리대책’ 등과 연계하여 조속한 조성 가능토록 적극 추진</p> <p>○ 청년·혁신창업·사회적 경제·일자리 창출·지역활성화 복합창업 공간으로 확대</p>
1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기업 간 M&A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같은 기업당 보증 한도 확대 및 전담조직 신설</p> <p>○ 같은 기업당 보증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p> <p>○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사정 생략 기준금액을 상향*</p> <p>* (협동조합) 3천만원 → 5천만원</p> <p>○ 영업본부 內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컨설팅 등의 업무를 병행</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이 일반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M&A보증대상기업에 협동조합을 추가</p> <p>○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M&A 보증지원대상에 협동조합 추가*</p> <p>* M&A운용기준개정('17.11.10)</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p> <p>○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22년까지 최대 5천억원 보증 공급</p> <p>* 정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부재정 확보 추진</p>
16. 매출채권보험의 부실률이 낮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관련 업종들에 대한 보험가입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관련 업종에 대한 보험인수가 타업종과 차별화되지 않도록 운용중임</p> <p>○ 대표적인 매출채권보험 상품인 다사랑보험의 경우 전체 18단계 신용등급 중 16등급 기업까지 보험 가입 가능</p> <p>* 하위 2개 등급(17~18등급) : 연체, 신용관리 정보 보유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7. 사회적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 지표 도입하여 일반보증과 차별적으로 운영</p> <p>○ 종합적인 사회가치 측정을 위해 사회적가치, 경제적가치, 혁신성과를 반영한 평가 체계 마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경제 평가체계 고도화 추진</p> <p>○ 표준 사회적가치 평가모형 ('19년 개발 예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8.7월 착수 예정)</p>
18. 저신용등급 기업이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목표 달성과 리스크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미래성장성평가를 반영한 보증심사 체계 도입으로 신용평가등급은 다소 낮더라도 정책적 지원 필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p> <p>* 보통 등급(K7) 이하 기업 신규보증 비중 : ('15년) 59.5% → ('16년) 61.2% → ('17년) 62.3%</p> <p>**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 : ('15년) 57.3% → ('16년) 62.7% → ('17년) 68.7%</p> <p><input type="checkbox"/> 리스크 총량 통제 및 부문별 한도 조정을 통해 정책부문에 대한 보증 공급과 리스크관리의 균형을 유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정책성 보증*은 잠재부실률 통제 지표인 리스크인수율** 평가를 제외하여 적극적인 보증 공급을 유도</p> <p>*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스타트업지점(창업성장보증 전담 영업조직) 취급 보증 등</p> <p>**잠재부실률 측정 지표로 신용등급별 부도확률(PD값)을 보증금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p> <p>***'17년 신규보증 리스크인수율 : (전체) 4.1% vs (스타트업지점) 7.1%</p>
19. 위탁보증 도입 시 은행의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위탁보증 전환 후에도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등에는 보증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p> <p>○ 매년 적정 보증총량 부여를 통해 은행별 적정수준의 보증 규모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은 추가 보증 지원 가능</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위탁보증을 도입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축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p> <p>* 향후 정부 부처간 논의를 통해 정책결정 확정시 위탁보증 시범사업 진행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0.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약 보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약보증*을 도입하여 시행 중</p> <p>* 상생보증 프로그램('09.2월, 5월), 지역 상생보증 프로그램('09.5월, 11월),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11.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보증('10.9월)</p> <p>○ '17년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보증과 관련하여 2개 대기업 * 22억원 출연, 333억원의 보증지원</p> <p>* 네이버(주), 롯데케미칼(주)</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이전 상생협약보증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실적 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p> <p>○ 대기업의 참여 확대, 지원 대상 다양화, 은행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대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p> <p>○ 우리은행에서 운용중인 대·중소 동반성장펀드와 연계하여 협력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할 계획 ('18.3월)</p> <p>* (은행) 동반성장펀드를 재원으로 대출금리 우대 (신보) 보증료를 차감 보증비용 우대 보증료 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기업 육성 중심의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확충</p> <p>○ 본점에 40창업부를 신설하고 전국 8개 거점지역에 전담 영업조직인 스타트업지점을 확대 운영</p> <p><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유형 및 성장 수준에 따른 Start-up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확대</p> <p>○ Start-up NEST, 40 Start-up 보증, 2030 Start-up 보증 등 도입 ('17년)</p> <p><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육성 관련 다수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확대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전용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창업기업 육성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p>
22. 창업기업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지방소재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분야별 지방기업 우대 방안 시행</p> <p>○ 지방소재 우수 창업 신성장기업을 지원하는 지역별 유관기관과의 협약 상품 도입</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예시) 부산경남영업본부-하나은행 영남 영업그룹 협약보증 등</p> <p>○ 지역 대표산업 우대보증 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선정한 핵심육성산업(지역 대표산업)을 우대 지원 중</p> <p>* 보증료 차감(0.1%p), 보증비율 상향(90%), 보증한도 우대</p> <p>** '17년 지원실적: 1,816개 기업, 6,746억원</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p> <p>* 비수도권 보증잔액 비중: ('15년) 48.8% → ('16년) 49.1% → ('17년) 48.8% → ('18년) 49.0% (계획)</p>
23. 원금감면이 수반되는 재기지원 보증 공급 증가에 대비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및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제도전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p> <p>○ 실패경위, 사업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 도입 등 재창업기업 자생력 향상 강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대내·외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한 경영컨설팅 및 CEO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창업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재실패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p>
24.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확대 및 전담조직 신설</p> <p>○ 같은기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p> <p>○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사정 생략 기준금액을 상향*</p> <p>* (사회적기업) 5천만원 → 1억원 (협동조합) 3천만원 → 5천만원</p> <p>○ 영업본부 내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컨설팅 등의 업무를 병행</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p> <p>○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22년까지 최대 5천억원 보증 공급</p> <p>* 정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부재정 확보 추진</p>

한국산업은행

7. 한국산업은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대우조선해양의 내부개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직접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 정상화 관리위원회'가 경영 목표 부여 및 평가, 자구계획 이행점검, 경영진 추천 등 핵심권한을 위임 받아 종합적으로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 전반을 점검 중임</p> <p>○ 매월(필요시 수시) '관리위원회'를 개최,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리 방안을 시행 중에 있음</p>
2. 대우조선해양 우수 설계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인력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재 회사는 핵심 연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p> <p>○ (연구 전문직제 시행) 연구 인력에 대한 별도의 경력·성장 Path 마련 및 성과·역량 중심의 보직 부여 추진</p> <p>○ (연구개발비 확대) 직무 난이도 및 연구결과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 보상제도 마련 추진</p> <p>○ (교육기회 확대) 세미나, Cyber-MBA 과정 등 교육 기회 확대</p> <p>○ (승급·승격 우대) 핵심 직군에 대한 특별 승격기회 부여 등 인사 고과 우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대우조선은 임직원의 자회사 재채용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적임자 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중임 (‘18. 2. 26자 제정)</p>
4. 대우조선해양 내 무급휴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무급순환휴직 대상 직원이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 앞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음</p>
5. 대우조선해양이 전국대학을 1~5 군으로 서열화해 서류전형 검토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신입사원 채용*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공정한 채용절차 마련을 회사 앞 요구하였으며, 회사는 관련 규정 제정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임 * '15년 이후 신입 대졸채용 全無</p>
6. 자본시장 활용 등 기업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은 채권단 협의를 통해 부실발생기업의 특성 및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新기업구조조정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자본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노력하겠음
7. 기간산업 기업 구조조정시 산업적 비전과 재편 전략이 적극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정부는 '17.12월 산업경쟁력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시, 산업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 유지·활용하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산업 내 현안 기업의 경쟁력, 산업 생태계, 업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음
8.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임 <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현대상선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현대상선의 발전 방향에 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정부는 해수부 중심으로 한국 해운업 재건 방안을 준비 중이며, 안정적인 원양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중임 ○ 경쟁력 있는 선박, 기기, 터미널 투자 지원을 통해 선복량 100만 TEU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은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립 추진중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10. 한국GM의 2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이 매출원가 산정내역 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높은 매출원가율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상세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주주감사 또한 실시(회사 비협조로 중단 상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료 제출을 거부 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은 국정감사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주주감사 등 제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문서 및 면담 등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통해 재요청하고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p> <p>○ 산은은 소수주주로서 한계가 있으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향후에도 견제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p>
11. 출자회사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정기적으로 출자회사 관리현황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 앞 보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출자회사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p> <p>○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앞 수시로 보고중이며, 국회에도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황보고 수행중임</p> <p>* 동 방안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17.10.11자 1차 권고안에서도 제시되었으나, '17.12.20자 최종 권고안에는 제외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체계적인 출자회사 관리를 수행함과 아울러,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출자회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p>
12. 여신심사 과정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내부통제)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부점장 및 팀장 승진대상자 연수시 부패사태 전파 등 '윤리준법교육' 진행</p> <p>○ 자체적발 강화 및 엄정한 처벌 실시 (원스트라이크 아웃)</p> <p><input type="checkbox"/> (심사제도) '심사평가인 행동강령' 제정</p> <p>○ 부실여신 예방 및 자산건전성 제고</p> <p>○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심사 공정성 제고</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내부통제) 여신 담당자의 청렴 의식 제고노력 지속</p> <p>○ 여신 연수시 윤리준법교육 지속 시행</p> <p>○ 부패취약분야 담당자(여신심사 등)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p> <p><input type="checkbox"/> (심사제도) 통합데이터 기반의 심사분석시스템 재구축</p> <p>○ 내·외부 심사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심사 DB 구성 및 분석시스템 재구축</p>
13. 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 관련 신용 위험분담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신용위험분담 확대운영 방안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금융기관 온렌딩대출 한도 배정시 신용위험분담대출 실적을 중개금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용위험분담대출 확대
14. 퇴직연금 끼워팔기 관행 및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없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에 대해 재점검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은 퇴직연금사업과 관련하여 구속성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 영업점 앞 퇴직연금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중임 □ 산은은 타 퇴직연금사업자와 공정한 조건 하에 경쟁중이며,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음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구속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임 □ 산업은행의 퇴직연금사업 수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안정망을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 수행과 정책금융의 지속 수행에 필요한 장기 산업자금 조달 등을 위한 것으로, ○ 거래기업에 대한 통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형(DB)” 위주로 사업을 지속하고, 가입자수익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컨설팅 확대 및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15. 서양네트웍스 관련 온렌딩대출이 적정한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점검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 온렌딩대출 자금 사용용도 증빙 자료 징구·확인</p> <p>○ 중개금융기관(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동사의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징구·확인 함</p> <table border="1"> <tr> <th>중개금융기관</th> <th>잔액</th> <th>여신기간</th> <th>비고</th> </tr> <tr> <td>하나은행</td> <td>-</td> <td>'15.6.30 ~'17.6.15</td> <td>상환료</td> </tr> <tr> <td>신한은행</td> <td>50억원</td> <td>'15.6.16 ~'18.6.15</td> <td>만기 일시상환 (예정)</td> </tr> </table>	중개금융기관	잔액	여신기간	비고	하나은행	-	'15.6.30 ~'17.6.15	상환료	신한은행	50억원	'15.6.16 ~'18.6.15	만기 일시상환 (예정)
중개금융기관	잔액	여신기간	비고										
하나은행	-	'15.6.30 ~'17.6.15	상환료										
신한은행	50억원	'15.6.16 ~'18.6.15	만기 일시상환 (예정)										
16. 창조성장금융부문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 '17년말 조직개편시 기존의 '창조성장금융부문'을 '중소중견금융부문*'으로 재편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량 집중</p> <p>* 중소중견금융실, 온렌딩금융실, 컨설팅실로 편제</p>												
17.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고위직의 여성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 (남성육아휴직) 2017년중 2회에 걸쳐 전직원 앞 육아휴직 관련 공문 발송</p> <p>○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1명 증가</p> <p>* '17.9월 2명 → '17.12월 3명</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고위직 여성비중 확대) '00년대 이전 여성 채용인력이 적어 상위 직급 여성비율은 낮은편이나, 발탁 승진 및 주요보직 임용 확대 등 차세대 여성리더 Pool 육성 중
18. 담보 및 재무상태가 양호하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 및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속 운영 ○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 연장('17.12월)을 통해 '18년중 기일 도래 원금 상환유예 지원 지속 ○ '18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속 운용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영업점 설명회 및 기업체 앞 홍보·안내활동을 강화하여 同상품 및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독려 ○ 향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요소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 검토 추진
19.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청렴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수립·시행중 ○ '17년 평가결과 전년대비 0.56점 상승한 8.30점을 획득하여, '15년(8.13점) 이후 최고점수 기록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청렴도 개선방안 지속 시행 ○ "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미흡한 내부청렴도 개선에 역점 ○ 부패사건 발생 예방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계획" 수립 실시 ○ 대고객 및 정책고객 대상 청렴 활동 지속 등
20. 산업은행의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재점검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규정 점검 ○ 금융투자업무 수행 임직원 앞 분기별 또는 월별로 거래내역 신고의무 부과 ○ 매매명세 신고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거래금액과 거래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임직원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규제 * '16.10월부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내부통제 강화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보유총액' 추가 신고 접수 ○ 임직원 주식거래시 유가증권 보유 총액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 '18년 3월중 전직원 앞 안내 및 시스템 구축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산업은행 퇴직자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철저한 내부감시 시스템과 재취업자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6.10월말 혁신방안 발표이후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여 구조조정기업 앞 신규 재취업은 全無함</p> <p>○ 투자자로서 권리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심의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취업을 엄격하게 관리중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기 원칙을 지속 준수하며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임</p>
22. 경영관리단 파견 후 구조조정 관련 업무로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인사운용상 관리</p> <p>○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통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경영관리단 파견 복귀시 업무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관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겠음</p>
23. 시행세칙에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 및 찬반 기록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이 8개 주요은행 등과 수행한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선 T/F” 결과('17.12.)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중</p> <p>○ 금융위 「新기업구조조정 방안」('17.4.) 중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에 근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8.3월말(예정)까지 시정·처리요구사항을 포함한 신용위험평가제도 개선 T/F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세칙 및 지침을 개정코자 함</p> <p>○ 내규 개정 이후 '18년 정기 및 수시 기업신용위험평가에 적용 예정</p>
24.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주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제도가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타당성에 관해 재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우선매수권 관련 제도는 은행연합회 제정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서 정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운용해 왔으며, 제기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전 금융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은 상기 논의 결과에 따라 은행연합회 및 금융당국 앞 우선매수권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p>
25.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스스로 고문으로 선정한 고문들의 자문료 환수여부를 검토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대우조선은 인적네트워크 및 전문성 활용, 영업비밀 사외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고문제도를 불가피하게 운용하였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문 운용을 최소화하여 현재 1명(해군 잠수함 건조자문 수행)의 고문역이 근무 중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회사의 외부 법률검토 결과(‘17.10.23), 既 지급 고문료 및 자문료의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p> <p>○ 고문계약은 고문의 경력, 지위, 전문성 등 용역의 질에 기초한 것으로, 고문용역의 양이 없다하여 고문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p> <p>전직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한 고문료는 업계 관행 등을 감안하여 지급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하기 어려움</p> <p>□ 다만, 회사는 ‘16.10월 제정한 「고문 관리 규정」에 의거, 고문의 역할, 위촉 방법 등 구체적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동 규정을 통해 고문역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객관성이 확보가 기대됨</p>
26.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로서 석탄화력 발전을 포함한 기존 투자에 대해 재검토하고, 향후 투자방향에 대하여 점검할 것	<p><처리결과></p> <p>□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및 GCF 이행기구로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중임</p> <p>○ 2007년 이후 태양광, 풍력 등 19개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총 2조 1,824억원의 금융지원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 GCF이행기구로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코자 신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p> <p>전통 발전소의 오염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p>
27. 적도원칙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산업은행의 대응전략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 적도원칙 이행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및 내규 개정(‘18.1.22)</p> <p>○ 주관부서 일원화*로 적도원칙 이행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p> <p>* 당초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상품(PF·기업대출)별로 주관부서 분리 운영</p> <p>○ 내규에 적도원칙 준수요건 명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항 반영</p> <p><향후 추진계획></p> <p>□ 환경·사회심사 강화 등 적도원칙 성실이행 도모</p> <p>○ 대출 승인시 해당 계획사업의 적도원칙 준수 가능성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서 첨부</p> <p>○ 적도원칙 채택기관 의무사항* 이행</p> <p>* 적도원칙협회 앞 적도원칙 이행결과 보고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8.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이차보전자금이 특정 대기업에 약 50%집중되어 지원의 형평성 및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 관해 점검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이차보전은 정부시책에 의하여 정부, 지자체가 대상업체 및 지원 조건 등을 결정한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한 상품으로,</p> <p>점검 결과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정한 대출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신취급에 만전을 기할 예정</p>

중소기업은행

8. 중소기업은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향후 한계기업의 건전성 악화 및 이에 따른 BIS 비율 하락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부실화 가능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체인지업 등 구조 조정 추진, 경영정상화 지원 중</p> <p><input type="checkbox"/> BIS비율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배당 정책에 적극 대응, 2018년 배당률을 당초 목표*(34%) 대비 크게 낮춘 30.89%로 결정(BIS비율 0.03%p ↑)</p> <p>*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 방향(기재부)</p> <p><input type="checkbox"/>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성공적 발행을 통해 3,500억원 자본 조달 완료(BIS비율 0.21%p ↑)</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한계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대출 자산의 質을 개선하여 위험가중 자산 감축을 추진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조건부자본증권의 추가 발행 및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계획에 적극 대응하겠음</p>
2. 실적이 저조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대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IP사업화자금대출」의 상품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 중이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을 통해서도 자금 지원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음</p>
3. 영화산업 투자 시 수익성 외 투자 목적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영화산업 발전과 생태계 다양성 지원을 위한 저예산·다양성 영화 투자 진행</p> <p>○ 저예산영화 “소공녀”(17.4.18.), “올드마린보이”(17.9.8.), 극장용 애니메이션 “언더독”(17.12.29.)</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저예산·다양성 영화에 대한 투자 확대에 노력하겠음</p>
4.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및 절차 위반, 타 부처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영화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투자처리 절차 중 문제점이 발견된 일부 절차에 대한 개선 조치</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도출된 문제점은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향후 영화사업 프로젝트 투자실행에 적극 반영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5.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p> <p> * 조선업종 대출잔액 : 1조 4,015억원('16년) → 1조 4,127억원('17년)</p> <p>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하고 있음</p> <p> * '17년말 중기대출 만기연장률 : 95.0%</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지원에 지속 노력하겠음</p>											
6. 영내사고 보상이 제외된 나라사랑 카드 특약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영내사고 보상 추가 및 보상금액 증액하여 서비스 확대 추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현 행</th> <th>확 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영 외</td> <td>일반사고 1천만</td> <td>일반사고 5천만</td> </tr> <tr> <td>대중교통 5천만</td> <td>대중교통 1억</td> </tr> <tr> <td>영 내·외</td> <td><추가></td> <td>화재·폭발· 붕괴 5천만</td> </tr> </tbody> </table> <p> * 약관변경에 대한 여신금융협회 심의 완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서비스 변경에 대한 고객고지(1개월) 후 확대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임 ('18.4월 중)</p>	구 분	현 행	확 대	영 외	일반사고 1천만	일반사고 5천만	대중교통 5천만	대중교통 1억	영 내·외	<추가>	화재·폭발· 붕괴 5천만
구 분	현 행	확 대										
영 외	일반사고 1천만	일반사고 5천만										
	대중교통 5천만	대중교통 1억										
영 내·외	<추가>	화재·폭발· 붕괴 5천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7.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출자한 홈앤쇼핑의 갑질행태 및 배임 문제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주요주주들과 협의하여 경영감사 요청('18.1월)</p> <p>○ 홈앤쇼핑 감사위원회가 감사 진행 중('18.2.28.~)</p> <p>* (감사범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직 운영, 회계, 업무실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배임 등 경찰수사 사항 포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감사결과 문제 확인시 해당 임직원의 인사조치 등 개선을 요구할 계획임</p> <p>* 감사결과 홈앤쇼핑 이사회 및 주총 보고 예정</p>
8. 자회사 재직 중인 퇴직임직원의 비위 사실 인지 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관련법규 및 내규에 의거 자회사 재직 중 인사조치 요구 가능</p> <p>* 국정감사시 지적받은 6명은 업무불철저에 따른 경미한 수준의 징계(주의촉구)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자회사 임원 징계사실 접수시 '경영관리위원회'에 정식 부의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임</p>
9. 선박금융대출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조선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전담 은행으로 대형선사(SK해운, 현대상선 등 대기업)가 실차주인 선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우 적은 상황이나,</p> <p>○ 해운 경기 회복 추이를 감안하여 선박금융에 대한 참여를 검토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국내 조선소에서 발주 하는 선박 금융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p>
10. 기술금융 취급 시 담보 취득 비중이 높은 점 등 보수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018년부터 영업점 KPI를 변경하여 담보대출은 목표의 1/2 이내에서 실적 인정하고, 신용·담보대출 실적 가중치를 차등 운용 중 (신용 120%, 담보 70%)</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역별 교육 시행 및 상품 안내 등을 통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음</p>
11.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수신상품 취급 제한기간 확대(취급 후 1개월 → 3개월), 자점감사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교육 확대 및 자체점검을 통해 구속성예금 의심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2. 퇴직연금 끼워팔기 관행 및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없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에 대해 재점검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출과 연계한 퇴직연금 영업 관행의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규정 확대 운용과 전산통제 지속 실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장기운용 되는 퇴직연금 특성에 맞게 정기에금 비중을 낮추는 등 퇴직연금 운용상품 변경을 통해 고객 수익률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p>
13. 사회적기업의 여신금리가 시중 은행 대비 높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리감면 제도 신설 ('18.1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p>
14.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차별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18.3.23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추진 완료</p> <p>○ 무기계약직 약 3,300명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하고, 업무 범위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용</p> <p>* 급여, 승진, 평가 등 인사제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의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업무에 제한이 없는 종합 금융컨설턴트로 육성할 계획임</p>
15. 승진 등의 인사운용 시 열악한 여성인력 활용실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여성인력 활용실태 개선을 위해 3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 인력* 지속 확대</p> <p>* 여성 관리자(3급 이상) 비율 : 13.5%(’16년) → 15.4%(’17년) → 17.1%(’18.2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여성인력의 승진 및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강화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여성인력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실 있는 인사제도 운용* 및 개선 지속 추진하겠음</p> <p>* 유연근무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자녀돌봄휴가 등</p>
16. KDR한국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낙하산 인사, 과당 배당, 해당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KDR한국서비스와 경쟁입찰 비율*을 지속 확대하며 수의계약 관행 개선중</p> <p>* 경쟁입찰 비율 : 57%(’15년) → 62%(’16년) → 68%(’17년)</p> <p><input type="checkbox"/> 감사 1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외부 인사로 교체(* 17.3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input type="checkbox"/> 매년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행우회에 배당분은 자본금의 15~20%인 6천만원 수준, 2016년에는 이익잉여금 중 일부인 30억원에 대한 중간 배당 실시</p> <p><input type="checkbox"/>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처우개선 방법 논의 중 (’17.11.1 ~ ’18.2.21, 총 8차 협의 진행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동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자체 자생력을 강화(외부 매출 확대)하는 등 일체의 특혜 제공도 없도록 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임원의 임기 만기시 외부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이익잉여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이익잉여금 사용 제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가능한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음</p>
17. 자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KT&G 주식을 조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경영여건 변화로 주식 보유가 매각보다 기업은행 경영상 이익에 부합, 당초</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매각 계획 철회 의결('17.9.20) 후 매각 시점 검토 중</p> <p>○ 現 BIS비율은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 중으로 자본 적정성에 문제 없음</p> <p>○ 고배당주로 매년 배당수입으로 BIS비율 1bp상승 등 자본개선 효과 (약 2,000억원의 중기대출 재원 확보)</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KT&G 주가 동향 및 관련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BIS 비율 하락 등 유사시 자본확충 방안으로 매각 추진하겠음</p>
18.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단계별 신규 사업 및 추진계획 수립</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청렴도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근무기강 확립의 날을 통한 자체 점검 및 교육실시, 월별 청렴실천과제 선정 등)를 보완하고 단계별 신규 추진계획을 추가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p> <p>○ (인식단계) 직원들의 청렴의식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마련</p> <p>○ (정착단계) 업무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반부패요인을 제거·개선하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위한 활동(외부 전문가 위촉, 청렴표어 직원 참여실시)</p> <p>○ (확산단계)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계획추진(개선과제 공감대 형성 및 직접참여 콘텐츠 제공, 윤리경영 우수사례 공모, 청렴 교육 강화)</p>

한국예탁결제원

9. 한국예탁결제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일산사옥을 매각할 경우 시설 재건축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본사 소재지 근처로 이전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각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일산사옥은 본사 지방이전 및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14.11월)에 따라 매각을 추진 중</p> <p>* '17.11월까지 24차례 공개매각 진행 → 모두 유찰</p>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법령(혁신도시법)에 따라 일산사옥의 매각은 지속 추진하되,</p> <p><input type="checkbox"/> 미매각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산사옥 활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p>
2. 기존 핀테크 개념에 자본시장, 자산관리 개념이 추가된 캡테크(cap-tech) 산업 육성 관련 정기협의회를 운영 중이나,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2건만 상품화 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므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 지원사업 강화</p> <p>○ 스타트업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18년도 사업계획* 반영('17.12월)</p> <p>* 신규 정보 상품 개발 및 보유정보 개방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증권정보 개방 확대</p> <p>○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무료제공 중인 API* 증권정보 확대 (43종→55종)('17.12월)</p> <p>*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인터페이스</p>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캡테크 플랫폼 개선을 통한 정보 이용확대('18.6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input type="checkbox"/> 고부가가치 정보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컨설팅 실시('18.11월)</p>
3. 최근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으나, 국내 증권사의 요청이 큰 미국이 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외국보관기관과 협상을 통해 미국 시장 등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인하('18.1월)</p> <p>○ (미국) 5 USD → 4 USD (20% ↓)</p> <p>○ (인도네시아) 21 USD → 16 USD (24% ↓)</p> <p>○ (베트남) 25 USD → 20 USD (20% ↓)</p>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외국 보관기관과 주기적 협상을 통해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 추가 인하 추진</p>
4.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라 자본시장 전반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예탁결제원의 결제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혁신기술 관련 조직체계 등 정비</p> <p>○ 블록체인 개념검증 사업 ('17.12월)</p> <p>○ 혁신기술 관련 조직 개편 ('18.1월)</p>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혁신기술 관련 R&D 강화</p> <p>○ 전자투표 대상 Pilot(시범사업) 수행 ('18.12월)</p> <p>○ 주요업무 대상 신기술 검증범위 확대 ('18.12월)</p> <p>○ 주요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검토대상 확대 (연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5. 전자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도입 계획인바, 보안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개념검증사업 수행 시 보안요소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검증 시 보안 요소(암호화) 포함 (17.12월)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Pilot 수행 시 인증적용 및 통신 구간 암호화 등 보안기능 설계(18.12월)</p> <p><input type="checkbox"/> Privacy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제 표준 암호화 기술 적용</p> <p><input type="checkbox"/> 블록체인 기술의 취약점 분석·평가, 모의해킹 및 보안성 검토</p>
6. 현재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신탁 업무 관련, 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을 근거로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고 수행중이나,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탁업 업무 인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 舊 재정경제부 유권해석*(05.8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교환사채 등 업무에 한정하여 인가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p> <p>* 신탁표시를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業으로 영위하지 않는 한 신탁업 인가 불필요</p> <p>** 상법시행령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p>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p> <p>* 신탁표시 행위에 대한 별도 수수료 부과 불가</p>
7. 2019년 도입 예정인 전자증권 제도의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기존 시스템의 높은 보안수준 유지를</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위한 정보보호 인력 확대 및 예산 투자</p> <p>※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보안 기준을 상회</p> <table><tr><th>구 분(기준)</th><th>세 부</th><th>비 율</th><th>비 고('18.2월)</th></tr><tr><td>정보기술 인원 (5%)</td><td>147명</td><td>25.1% (+20.1%)</td><td>전사인원 대비 IT인원</td></tr><tr><td>정보보호 인원 (5%)</td><td>9명</td><td>6.1% (+1.1%)</td><td>IT인원 대비 정보보호 인원</td></tr><tr><td>정보보호 예산 (7%)</td><td>63억</td><td>12.4% (+5.4%)</td><td>IT예산(324.8억) 대비 정보보호 예산</td></tr></table> <p>○ 업계 최고 수준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p> <p>- 해킹 및 악성코드 탐지·차단 장비, PC보안 솔루션 등 28종의 보안시스템 구축·운영</p> <p>○ 24×365 상시 보안관제 실시</p> <p>□ 신규 개발 내역에 대한 보안검증 강화</p> <p>○ (기술구조 검증) 관련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기술구조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 개발단계에 반영 ('18.5월 ~ 7월)</p> <p>*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 국가정보원</p> <p>○ (소스검증) 개발된 프로그램 소스는 수시로 점검하여 취약점 제거 ('18.8 ~ '19.9월)</p> <p>○ (모의해킹) 오픈 전 완성단계 시스템에 공격자 관점에서 모의해킹 실시 ('19.3월 ~ 9월)</p> <p>○ (사업보안관리) 사업 중 외주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준수 지속 점검</p>	구 분(기준)	세 부	비 율	비 고('18.2월)	정보기술 인원 (5%)	147명	25.1% (+20.1%)	전사인원 대비 IT인원	정보보호 인원 (5%)	9명	6.1% (+1.1%)	IT인원 대비 정보보호 인원	정보보호 예산 (7%)	63억	12.4% (+5.4%)	IT예산(324.8억) 대비 정보보호 예산
구 분(기준)	세 부	비 율	비 고('18.2월)														
정보기술 인원 (5%)	147명	25.1% (+20.1%)	전사인원 대비 IT인원														
정보보호 인원 (5%)	9명	6.1% (+1.1%)	IT인원 대비 정보보호 인원														
정보보호 예산 (7%)	63억	12.4% (+5.4%)	IT예산(324.8억) 대비 정보보호 예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8. 2018년에 새도보팅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나, 아직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역량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조직 확대(팀→부서, '18.2월) ○ 금융위 주관 “상장회사 주총지원 TF”에 유관기관·업계와 공동 참여('17.12월~'18.1월) ○ 전자투표 수수료 30% 감면(주총분산 참가사) ○ TV·신문·포털 광고, 참가주주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전자투표제도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8년 하반기)</p> <p><input type="checkbox"/> 전자투표시스템 개선('18.5월~11월)</p>
9. 성과연봉제 도입 직후 이사회를 거쳐 이를 폐지하였으나 성과연봉제의 내용과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합리적 보수체계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책수당·연봉제 기본급 조정 등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임금협약 체결 및 보수규정 개정('17.12월)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노사공동 위원회(T/F) 운영('18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직책에 따른 보수체계 개선 및 보수수준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0. 2019년 개관 예정인 부산증권 박물관 건립 관련, 콘텐츠·프로그램 및 인테리어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박물관 전시 콘텐츠 기초 연구용역 완료('17.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제사 주요 사건 정리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예정('18.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종합방안 수립 <p>* 건립일정 : 전시 설계('19.1월)→시공('19.7월)→개관준비(시범운영, 홍보 등)→개관('19.10월 예정)</p>
11. 이사회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비상임이사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유도로 국정감사 이후 '18.2월말 현재까지 이사회 상정안건 총 21건 중 2건(약 10%) 수정 결의</p> <p><향후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 비상임이사회 활성화·내실화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이해 제고 및 적극적 관심·참여 유도</p>
12. 공매도 관련,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자가 기관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대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주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등 공매도 거래 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주거래는 현재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예탁결제원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업체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여건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경우 동 연구에 적극 참여할 계획
13.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고용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근로자 34명 정규직 전환 ('17.12월) <input type="checkbox"/> 파견직·용역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이해관계자협의기구 구성·회의 개최 ('17.12월) <향후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파견직·용역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18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협의 완료예정 ○ 기존 계약 종료와 동시에 파견직은 직접 고용, 용역직은 자회사를 설립 하여 고용
14.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락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외국 보관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관기관 실사 및 연락체계 개선 완료 ('17. 11월) * HSBC(9.12), Citibank(9.13), Euroclear (11.21~11.22), Clearstream(11.23) <향후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외국 보관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 수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신규 보관기관 선임시 공개경쟁입찰 방식 활용, 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를 통해 투자비용 축소·안정성 강화 추진
15. 직원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카드 사로부터 카드모집에 따른 모집수당을 수수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기존 카드사와 계약 해지('17.12월) <input type="checkbox"/> 신규카드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진행 ○ 카드 모집수당을 회사가 미수수, 사용 직원에게 수혜가 가도록 제안 요청 (~2.22) ○ 기술협상 완료 (2.27~3.9) <향후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카드 모집 시 회사가 모집수당을 수수할 수 없도록 관련협약 체결 ('18.3월)

한국해양보증보험

10. 한국해양보증보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민간출자분 계획이 반복적으로 미달성되고 있으므로 업계 현황 및 관련기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현 가능한 예산과 계획을 수립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당초 출자예상기업인 해운·조선 업계의 불황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계획대비 부진</p> <p>○ '18. 3월말 현재, 44개 기업으로 부터 524억원(1,420억원 계획, 달성률 36.9%)의 민간자본 유치</p> <p><input type="checkbox"/> 동사 보증의 직접적 수혜 대상인 해운업계 및 간접 혜택을 받는 조선업계 및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출자 유치 계속 추진</p> <p>○ 동사는 '18. 7월 경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통합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p>
2. 국내 조선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당초 목적에 맞게,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8. 3월말 현재, 신조 관련 보증 승인액(1,599억원, 14척) 중 해외 조선소 건조 선박에 대한 지원비중은 35.7%(570억원, 4척)임</p> <p><input type="checkbox"/> WTO 통상분쟁과 관련하여, 동사의 보증이 조선업을 우회 지원한다는 오해를 야기하기 않기 위해서는, 해외 조선소 발주 프로젝트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18. 7월 경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통합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리 필요